

정책자료 2007-06

참여정부의 사회정책 성과평가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제 1 장	서 론	7
제 2 장	사회정책 주요 분야별 성과평가 지표	8
제 1 절	복지·의료	8
제 2 절	교육	26
제 3 절	인적자원 개발	36
제 4 절	여성·보육	39
제 5 절	주거복지	45
제 6 절	문화체육	57
제 7 절	환경	66
제 3 장	정책제언	74

표 목 차

〈표 2- 1〉	최저생계비 현황	15
〈표 2-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8
〈표 2- 3〉	장애인 고용률	18
〈표 2- 4〉	장애인 고용률 국제비교(20~64세)	19
〈표 2- 5〉	치매·중풍노인요양시설 수요충족률	20
〈표 2- 6〉	노년층 취업지원 건수	21
〈표 2- 7〉	국민연금 수급자수(1988년 이후)	21
〈표 2- 8〉	암환자 건강보험 급여율	24
〈표 2- 9〉	아동안전사고사망률	26
〈표 2-10〉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39
〈표 2-11〉	여성폭력대응예산 증가율	41
〈표 2-12〉	문화기반시설 수	57
〈표 2-13〉	주요 국가별 도서관 현황	59
〈표 2-14〉	세계 문화산업 규모	61
〈표 2-15〉	주요 국가의 생활체육참여율	64
〈표 2-16〉	주요 국가의 1인당 체육시설 면적	65
〈표 2-17〉	자연환경보호지역 면적	66
〈표 2-18〉	상수도보급률	71
〈표 2-19〉	하수도 보급률	73

그림 목 차

[그림 2- 1]	사회복지비 비중	9
[그림 2- 2]	고용보험적용 사업체수 비중	10
[그림 2- 3]	실업급여 수혜율	11
[그림 2- 4]	최저임금수준 및 인상률	12
[그림 2- 5]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수 및 수혜 근로자 수	13
[그림 2-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4
[그림 2- 7]	인구 천명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수	16
[그림 2- 8]	장애수당 수급자수	17
[그림 2- 9]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22
[그림 2-10]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비중	23
[그림 2-11]	출생시 기대여명	25
[그림 2-12]	출생시 기대여명의 국제비교	25
[그림 2-13]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7
[그림 2-14]	초중고 교사당 학생 수	28
[그림 2-15]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율	29
[그림 2-16]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	30
[그림 2-17]	유치원 취원율	31
[그림 2-18]	대학 진학률	32
[그림 2-19]	4년제 대학 교원 성비율	33
[그림 2-20]	초·중·고 급식이용학생 비율	34
[그림 2-21]	대학 학자금 대출 현황	35
[그림 2-22]	평생학습 참여율	36
[그림 2-23]	직업능력개발지원 예산 및 대상인원	37

[그림 2-24]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취업 현황	38
[그림 2-25]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	40
[그림 2-26]	육아지원예산	42
[그림 2-27]	육아지원시설수	43
[그림 2-28]	육아지원시설 이용아동수	44
[그림 2-29]	주택건설 추이(천호)	46
[그림 2-30]	공공임대주택 건설추이(천호)	47
[그림 2-31]	임대주택 건설비율	48
[그림 2-32]	주거비지출 추이(1979~2006년)	49
[그림 2-33]	주거비 지출률(주거비/소비지출 추이)	50
[그림 2-34]	주택 투자액 추이(1970~2006년)	51
[그림 2-35]	주택투자율(주택투자액 / GDP 추이)	52
[그림 2-36]	주택보급률 추이	53
[그림 2-37]	인구 천명당 주택수 추이	54
[그림 2-38]	지역별 주택보급률 추이	55
[그림 2-39]	1인당 주거면적 추이	56
[그림 2-40]	가구당 평균사용 방 수 추이	56
[그림 2-41]	문화산업 매출액	60
[그림 2-42]	외래관광객 입국자 수	62
[그림 2-43]	생활체육 참여율	63
[그림 2-44]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65
[그림 2-45]	연도별 자연환경보호지역 면적 (누계)	67
[그림 2-46]	주요 도시별 연간 미세먼지 농도	68
[그림 2-47]	4대강 상수원 수질오염도(BOD)	69
[그림 2-48]	한강 상수원(팔당) 수질오염도(BOD, COD 등)	70
[그림 2-49]	연도별 상수도 보급률	72
[그림 2-50]	연도별 하수도 보급률	73

제 1 장 서 론

과거 산업화 시대의 불균형발전의 누적과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구조조정과 개방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고용, 소득 등이 악화되면서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심화, 양극화 확대 등과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의 확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제도약과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회투자의 확대 노력의 지속은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사회투자와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노력을 경주해 왔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를 확대·보완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재정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감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정착과 동반성장 추구, 사회투자(복지·의료, 교육, 인적자원 개발, 여성·보육, 문화, 환경 등), 균형발전, 농촌지역 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의 발굴·육성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인적자본 확대를 위한 교육투자를 강화하였다.

사회복지예산 등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교육인프라 확충, 여성권한 확대 및 육아 지원 등 인적자본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균등한 기회 확대를 위한 제반 노력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생산성 높은 미래의 노동력 확보를 도모하였다. 지방과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한 국가경쟁력 확보 및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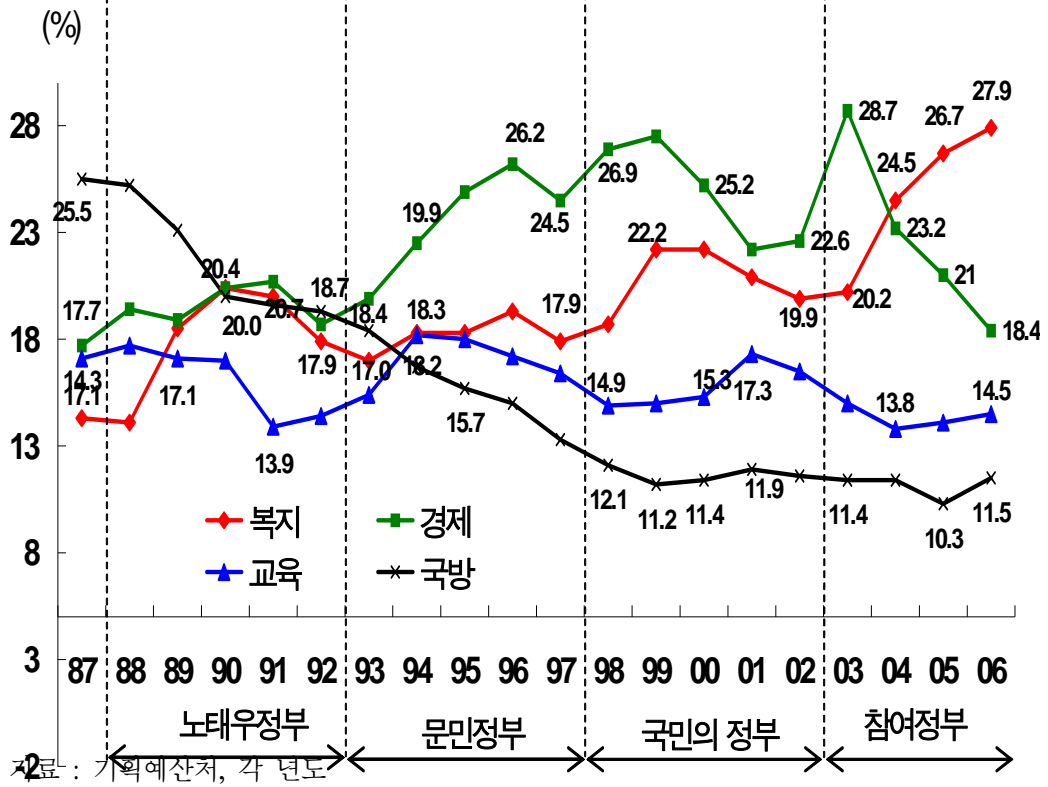
제 2장 사회정책 주요 분야별 성과평가 지표

제 1절 복지·의료

1. 사회복지비 예산비중

- 정부예산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비중은 참여정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19.9%에서 2006년 27.9%까지 증가함.
- 참여정부 기간(2002~2006년)의 복지증가율 내역(통합재정기준)을 보면, 복지지출 증가는 크게 세 가지 부문의 지출 증가에 기인함.
 - 국민주택기금규모: 0.4조원('02)에서 6.7조원('06)으로 증가(연평균105% 증가)
 - 사회보장연금지출 : 11.9조원('02)에서 23조원('06)으로 증가(연평균 18% 증가)
 - 사회보장연금 제외 복지지출 증가율은 21.8%로서 역대 최고 수준임.
- 사회복지 중점 확충분야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사회서비스, 여성보육서비스 분야임.
 - 기초생활보장 : ('02) 135만명, 3.4조원 → ('07) 167만명, 6.2조원
 - 사회서비스 : ('02) 2,722억 → ('07) 1조 2,945억원(연평균 36.6% 증가)
 - 여성보육서비스 : ('02) 2,461억 → ('07) 1조 3,366억원(연평균 40.5% 증가)

[그림 2-1] 사회복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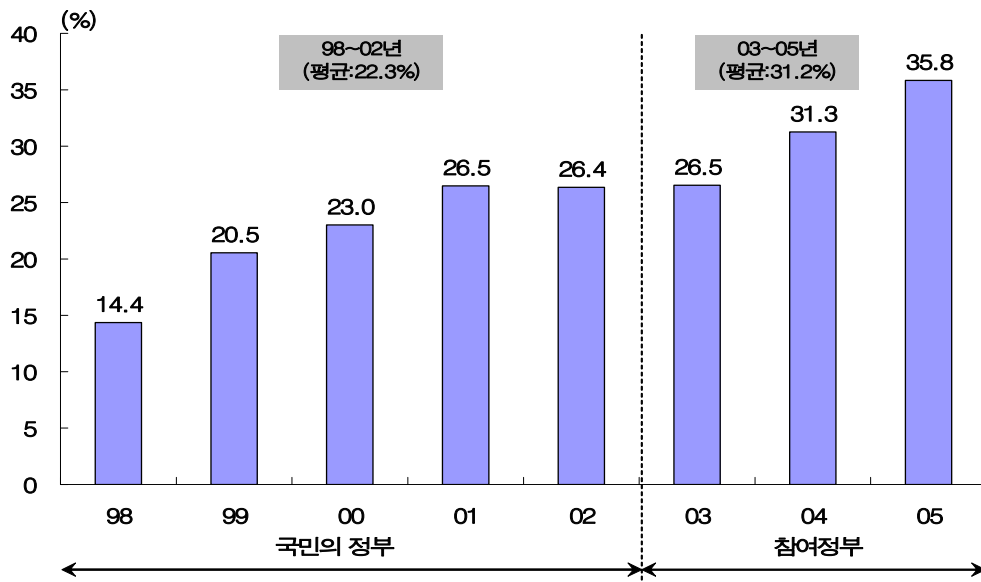


2. 고용보험

□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수는 국민의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참여정부 기간에는 이러한 증가세가 더욱 커짐.

— 전체 사업체수 대비 고용보험적용사업체수 비중은 2005년 현재 35.8%까지 늘어남.

[그림 2-2] 고용보험적용 사업체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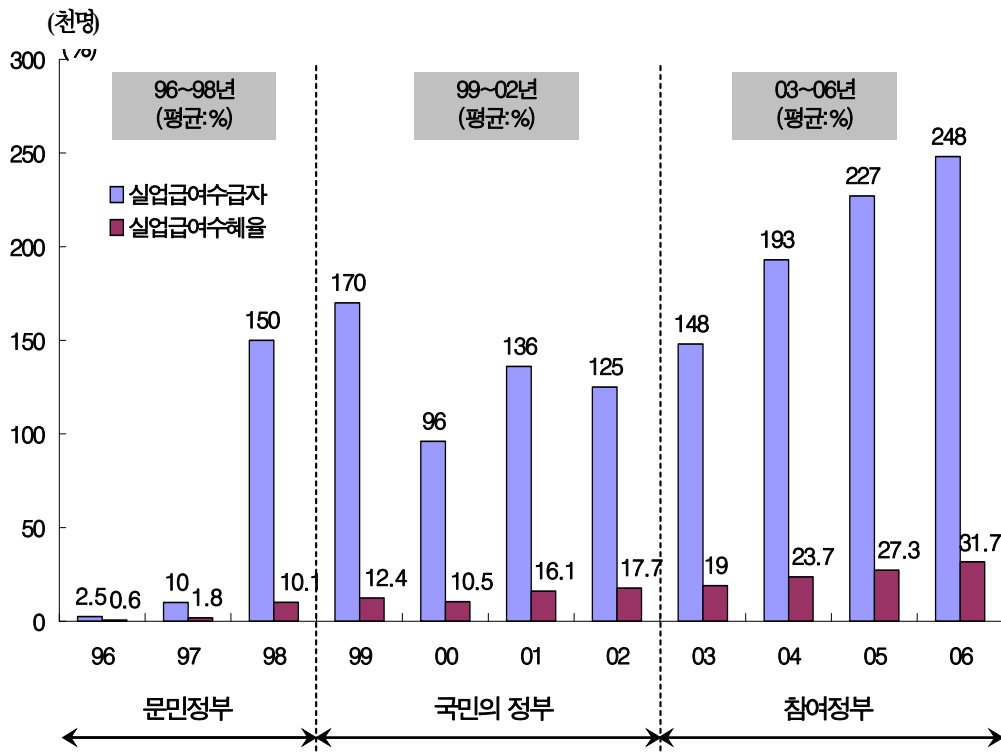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각 년도

□ 실업급여 수혜율도 매년 증가하여 실업자 3명 중 1명이 실업급여를 수혜 받음.

— 실업급여 수급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24만8천명까지 늘어남

※ 실업급여 수혜율은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

[그림 2-3] 실업급여 수혜율



자료 : 노동부,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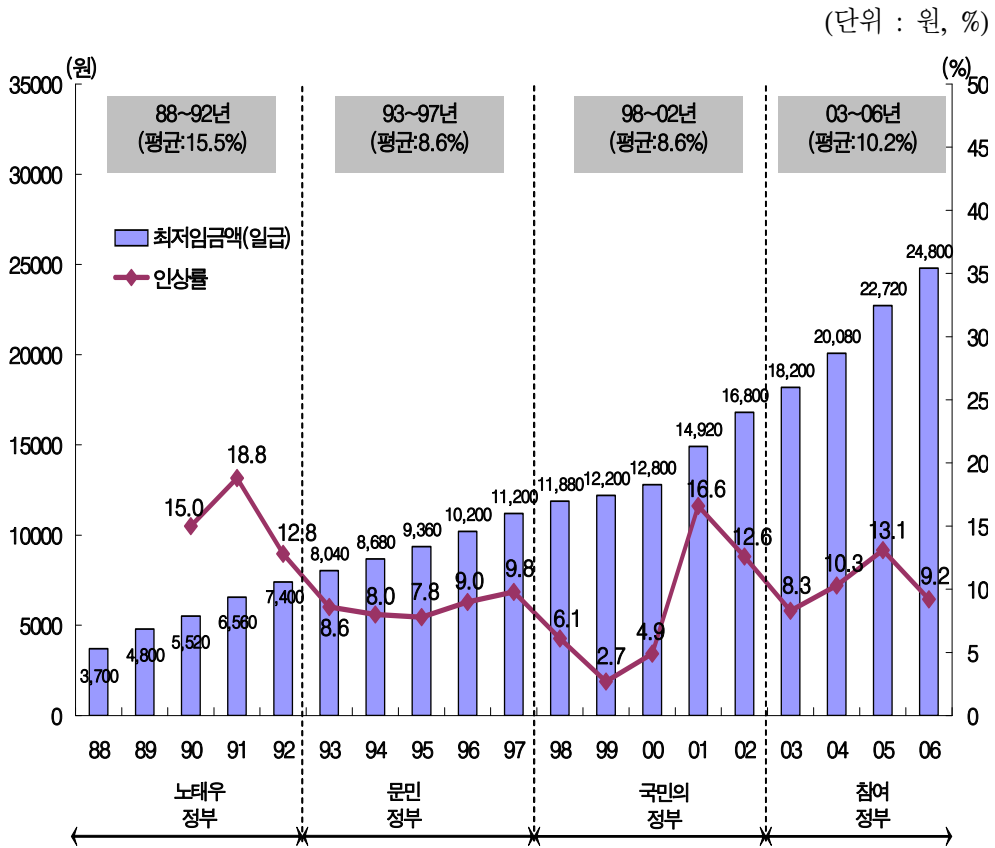
3. 최저임금

□ 최저임금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된 1988년의 경우 일급기준으로 3,700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24,800원으로 6.8배까지 증가함.

□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연평균 약 10%정도에 이르며 참여정

부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률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6년에 들어 다소 감소함.

[그림 2-4] 최저임금수준 및 인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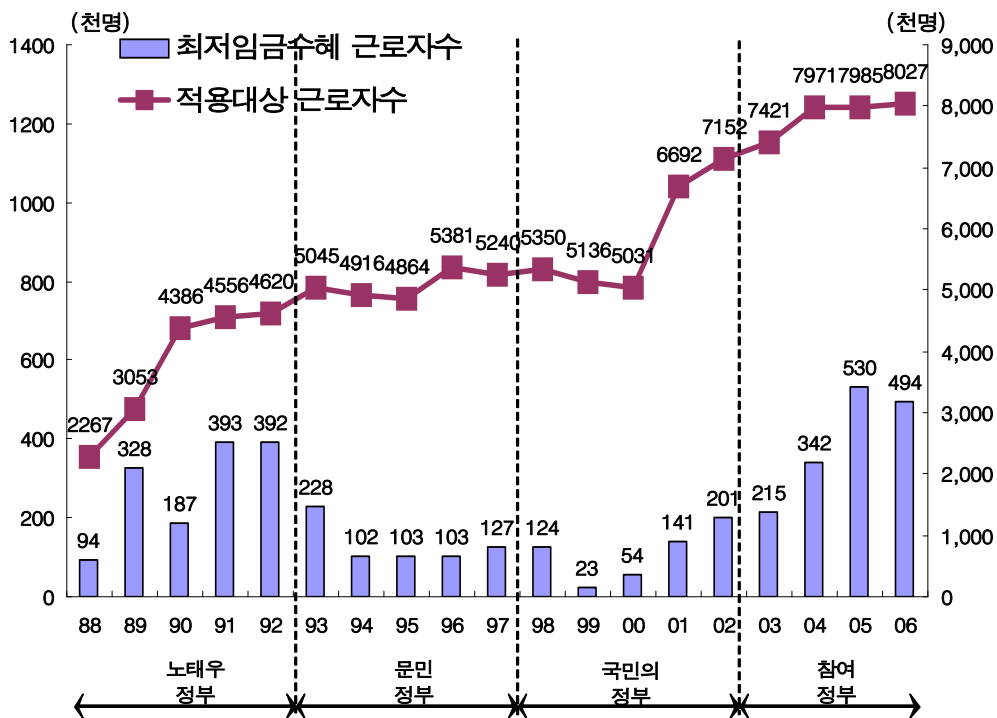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 최저임금 적용대상자 수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이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참여정부 기간인 2006년에는 802만7천여명까지 증가함.
- 최저임금 수혜근로자 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만3천여 명까지 줄었으나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06년은 49만4천여 명에 이릅니다.

-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수가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 수준의 상승에 따라 수혜 근로자수가 증가한 데 그 이유가 있음.

[그림 2-5]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수 및 수혜 근로자 수



주: 1) 1994~2005까지는 조사기간이 전년 9월~금년 8월까지이며 2006년은 '05. 9~'06. 12 동안임. 이는 2007년부터 조사기간이 당해년 1월~12월로 조정 되기 때문임.

2) 조사대상기업은 '88~'99까지는 상시종업원 10인 이상의 사업장, '00~'01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02 이후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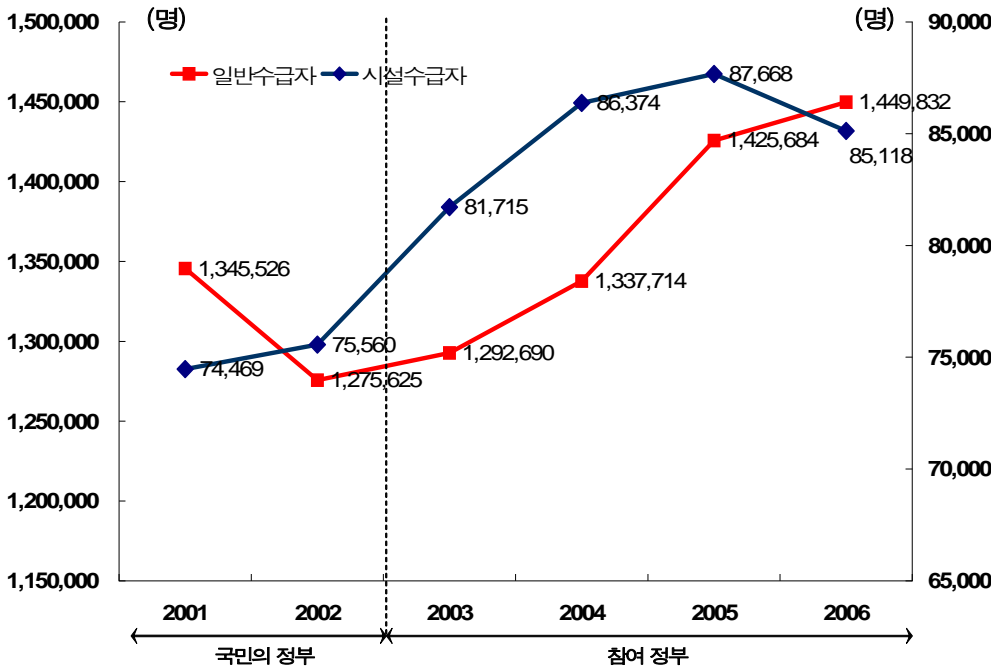
3)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통계, 각 년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02년에 감소하였다가 참여정부에 들어와 다시 증가하여 2006년에는 1,534,95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기초생활수급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빈곤층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당초 국가보호가 필요한 빈곤층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실질적으로 보호 수준을 높인 것에 기인함.
-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래('01. 10), 참여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범위축소('05. 7),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기준완화('06. 7), 외국인배우자 기초생활보장 포함('07.1), 부양의무자 범위축소('07.1) 등의 개선이 계속 이루어짐.

[그림 2-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6.7.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한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노력을 최대한 강화하고 있음.
 -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2002년 99만원에서 2007년 120만6천원으로 인상되어 참여정부 들어 22%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1〉 최저생계비 현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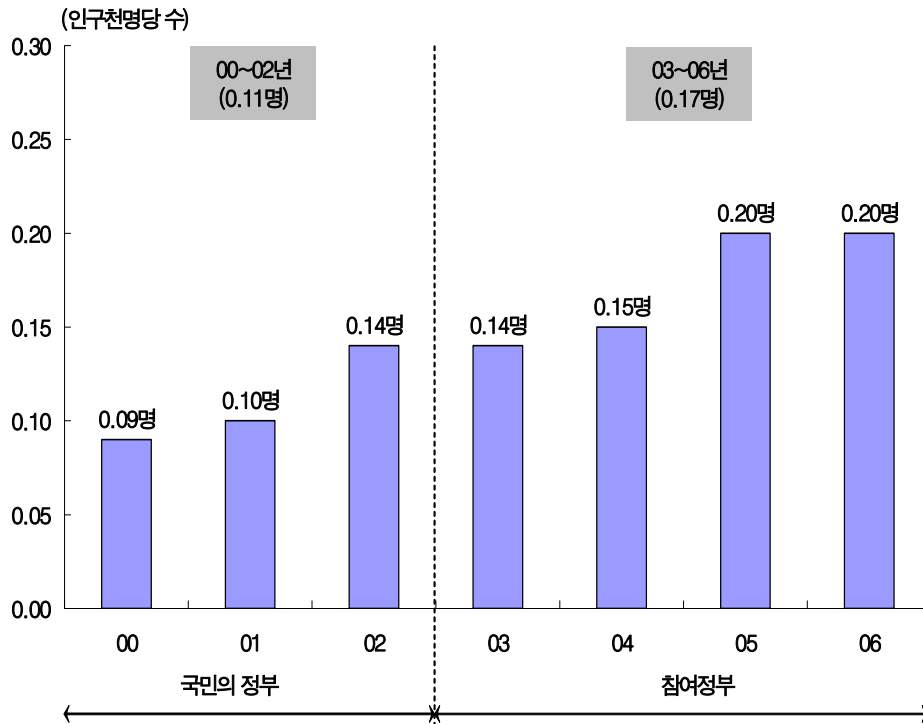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0	324	537	738	928	1,056	1,191
2001	334	553	760	956	1,056	1,191
2002	345	572	787	990	1,125	1,270
2003	356	589	810	1,019	1,159	1,308
2004	368	610	839	1,055	1,200	1,354
2005	401	669	908	1,136	1,303	1,478
2006	418	701	940	1,170	1,353	1,542
2007	432	734	973	1,206	1,405	1,610

자료 : 보건복지부, 공표자료

4. 복지전담공무원 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00년 4,496명, 2002년 6,738명, 2004년 7,136명, 2006년 10,11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대국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함.
 - 인구 천 명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는 2000년 0.09명, 2002년 0.14명, 2004년 0.15명, 2006년 0.20명으로 최근 들어 더욱 빠른 증가 추세를 보임.
 - 그러나 선진복지국가에 비해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사업을 적절히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그림 2-7] 인구 천명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수



주 : 인구수는 주민등록인구이며, 외국인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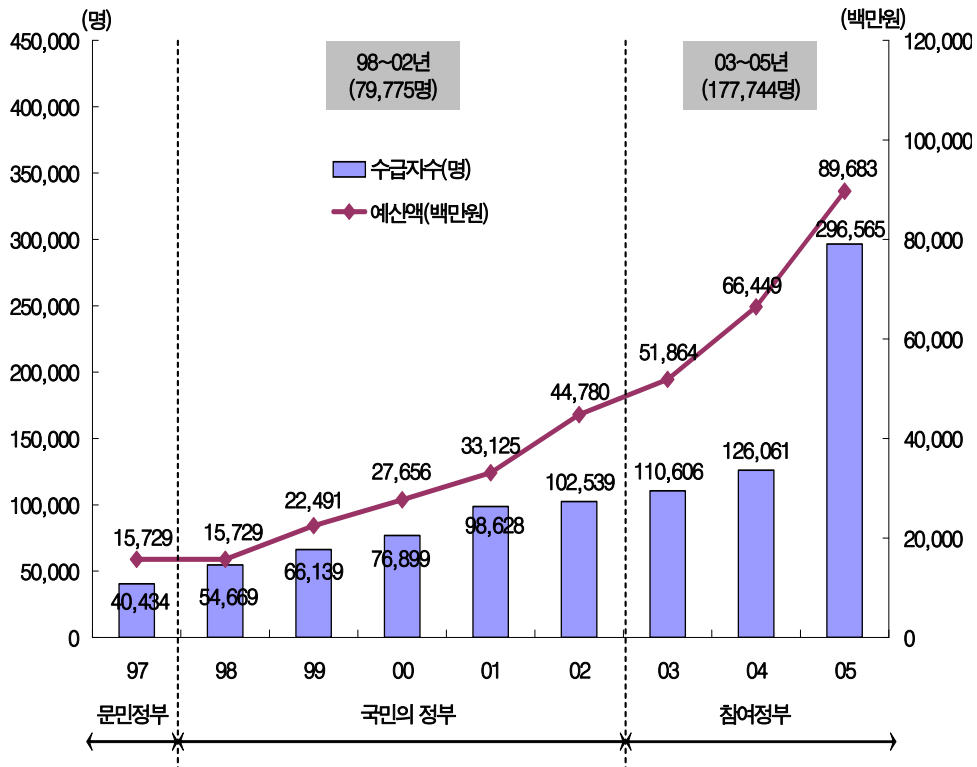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통계연보,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2006.

5. 장애수당 수급자수

□ 장애수당 예산액은 1997년 157억2천9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국민의 정부때부터 늘어나 2002년 447억8천만원로 증가되었고, 참여정부에서는 더욱 늘어나 896억8천3백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액의 변화와 함께 장애수당 수급자수도 1997년 40,434명에서 2002년 102,539명, 2005년 296,565명으로 급증함.

[그림 2-8] 장애수당 지급자수



자료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수당 집행실적 보고자료

6.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1998년 47.4%에 불과하였으나 참여정부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함.

— 전수조사가 실시된 1998년과 2003년을 비교하면 5년 동안 무려 60%의 증가율을 보임.

- 전수조사 결과와 표본조사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없어 2004~2005년의 두 개 년도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을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설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2-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

구분	1998	2003	2004	2005
전수조사	47.4	75.8	-	-
표본조사(철도, 도시철도 역사)	-	-	72.3	73.3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7. 장애인 고용률

- 15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률은 1995년 31.8%에서 2000년 34.2%로 2.4% 포인트 상승하였다가, 2005년에는 34.1%로 2000년도에 비해 0.1% 포인트 하락함.
- 2005년 전체 국민 고용률이 60.3%, 장애인 고용률이 34.1%로 나타나 상대적 고용률은 57%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보여줌.

〈표 2-3〉 장애인 고용률¹⁾

(단위: %)

연도	고용률		
	전체 국민	장애인	상대적 고용률 ²⁾
1995	-	31.8	-
2000	-	34.2	-
2005	60.3	34.1	57

주 : 1) 각 년도 전체 실업률은 6월 기준임.

2) 상대적 고용률(장애인고용율 ÷ 전체고용률)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2000년·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이탈리아의 1997년도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32.1%(상대적 고용률 60%)로서 2005년도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 수준과 비슷함.

—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DP 규모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멕시코와 포르투갈의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뚜렷한 차이가 없음.

〈표 2-4〉 장애인 고용률 국제비교(20~64세)

(단위: %)

구분	고용률			1인당 GDP (기준년도)
	전체	장애인	상대적 고용률	
호주	72.1	41.9	0.55	19,599(1998)
오스트리아	68.1	43.4	0.60	21,659(1997)
벨기에	58.7	33.5	0.54	20,510(1997)
캐나다	74.9	56.3	0.72	21,223(1998)
덴마크	73.6	48.2	0.61	27,687(1997)
프랑스	63.6	47.9	0.72	20,292(1997)
독일	64.8	46.1	0.67	21,043(1996)
이탈리아	52.2	32.1	0.60	17,524(1997)
멕시코	60.1	47.2	0.77	5,072(1996)
네덜란드	61.9	39.9	0.60	21,151(1997)
노르웨이	81.4	61.7	0.72	37,937(1998)
포르투갈	68.2	43.9	0.59	9,403(1997)
스페인	50.5	22.1	0.41	12,471(1997)
스웨덴	73.7	52.6	0.69	23,940(1997)
스위스	76.6	62.2	0.79	32,179(1997)
영국	68.6	38.9	0.53	21,707(1996)
미국	80.2	48.6	0.58	30,704(1996)
OECD(17)	67.6	45.1	0.60	-
한국	58.1	44.7	0.77	16,291(2005)

자료 : 1) OECD, 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 2003.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3) 통계청 홈페이지

8. 치매·중풍노인요양시설 수요 충족률

□ 치매·중풍노인요양시설 수요 충족률은 2003년 19.5%, 2004년 29.1%, 2005년 34.3%로 참여정부 시작년도인 2003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함.

— 그러나 향후 고령화율의 증가속도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고려할 때 치매·중풍노인요양시설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함.

〈표 2-5〉 치매·중풍노인요양시설 수요충족률

(단위 : 개소, 명)

구분	2003	2004	2005
전문요양시설 수용가능 병상수	6512	10,203	12,634
필요대상노인수	33,393	35,127	36,819
치매·중풍노인요양시설 수요충족률	19.5	29.1	34.3

주 : 치매·중풍노인요양시설의 필요 대상 노인은 65세 이상 추정인구에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보건복지부(2004)에서 적용한 0.84%를 적용하여 산출한 수치임.

자료 : 1)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5. 4.

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I)』, 2004.

3)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2005.

9. 노년층 인력활용 기회

□ 노인의 소득증대와 사회적 활동을 위해 참여정부는 노년층 취업기회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함.

— 노년층의 취업지원건수는 2005년 3만 5천 건에서 2006년 8만 건으로 증가하였고, 참여정부 기간 중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

〈표 2-6〉 노년층 취업지원 건수

연도	2005	2006
건수	3만 5천	8만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0. 국민연금 수급자수

□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연금수급자 1천만 명 시대에 진입함.

- 2002년 8,578,848명에서 2006년 10,055,677명으로 참여정부 기간 4년 동안 약 17% 증가함.
- 국민연금 수급자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하여 노후소득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표 2-7〉 국민연금 수급자수(1988년 이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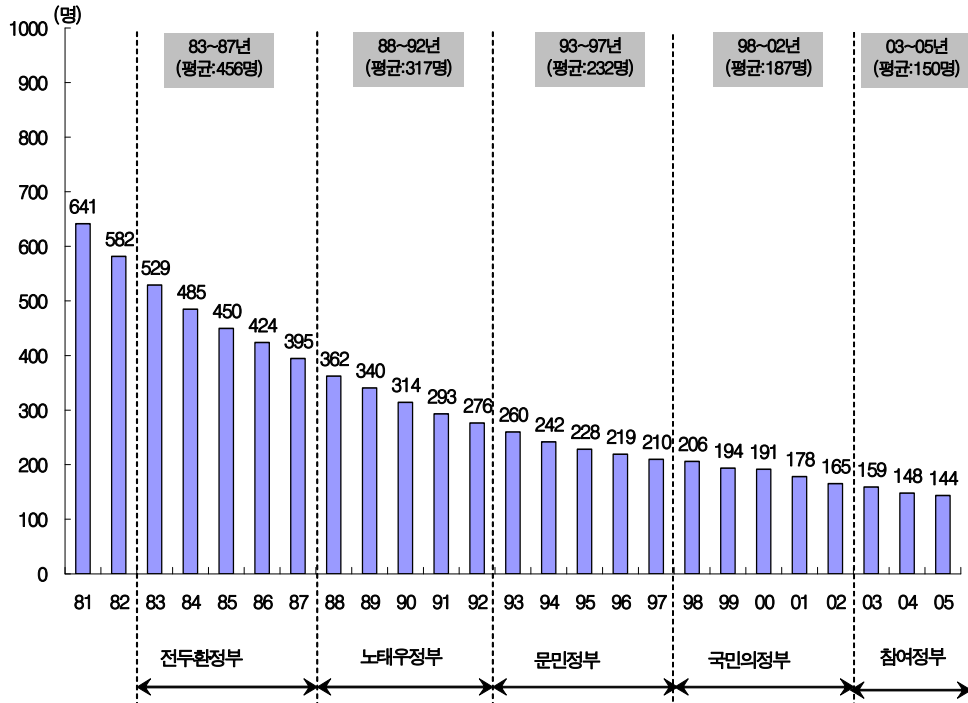
구분	수급자수	구분	수급자수	구분	수급자수	구분	수급자수
1988	3,128	1993	566,943	1998	1,116,732	2003	8,848,623
1989	59,347	1994	810,846	1999	1,053,303	2004	9,349,378
1990	255,312	1995	822,691	2000	7,943,733	2005	9,704,810
1991	377,825	1996	866,175	2001	8,469,304	2006	10,055,677
1992	483,274	1997	877,975	2002	8,578,848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월별통계」, 각 년도

11. 의료 인력

□ 의료인력의 공급도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는 계속 감소하여 참여정부에 들어와 평균 150명 수준까지 하락함.

[그림 2-9]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주 : 1) 의료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등을 포함한 것임.
 2) 의사1인당 인구수는 문민정부 1,071명, 국민의 정부 910명, 참여정부('03~'05) 778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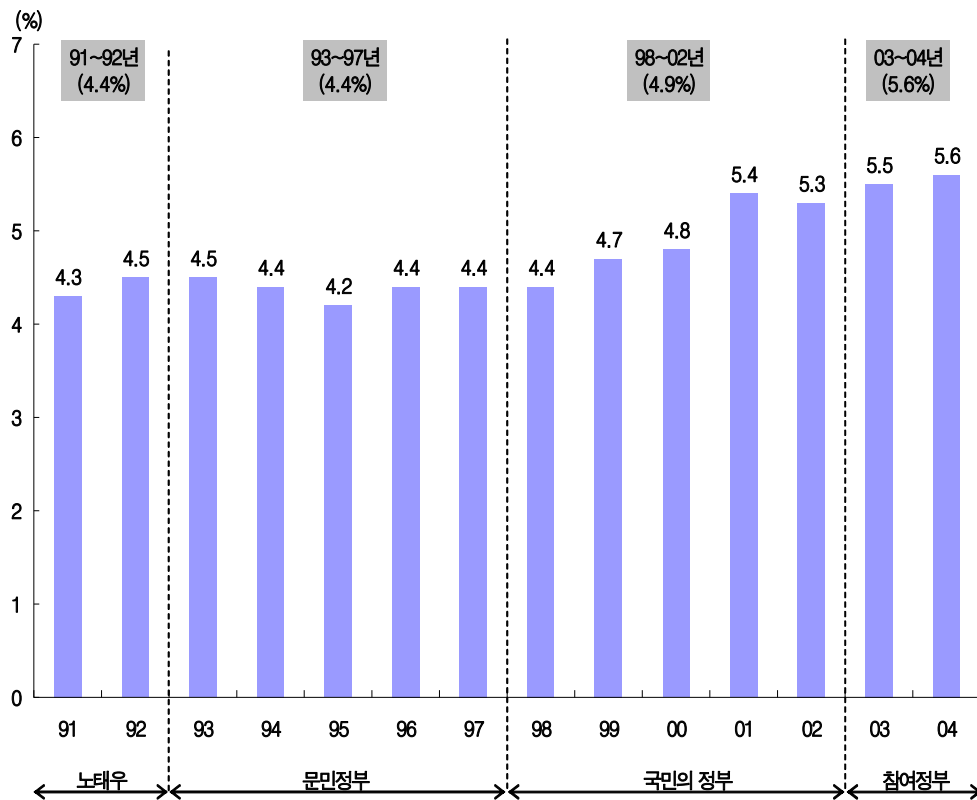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각 년도

12. 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비중

□ 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의료보장과 의료산업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민의 정부 이후 국민의료비 지출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참여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정책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매년 최고수준의 국민의료비 지출비중을 보임.

[그림 2-10]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비중



자료 : 보건복지부, 각 년도

13. 암 환자 건강보험 급여율

- 많은 치료비가 소요되는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율을 2004년 49.6%에서 2005년에는 66.1%로 확대하여 암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함.

— 최근의 사망원인에서 ‘암’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암 환자건강보험 급여율은 향후에도 더욱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표 2-8〉 암환자 건강보험 급여율

(단위: %)

구분	2004	2005
비율	49.6	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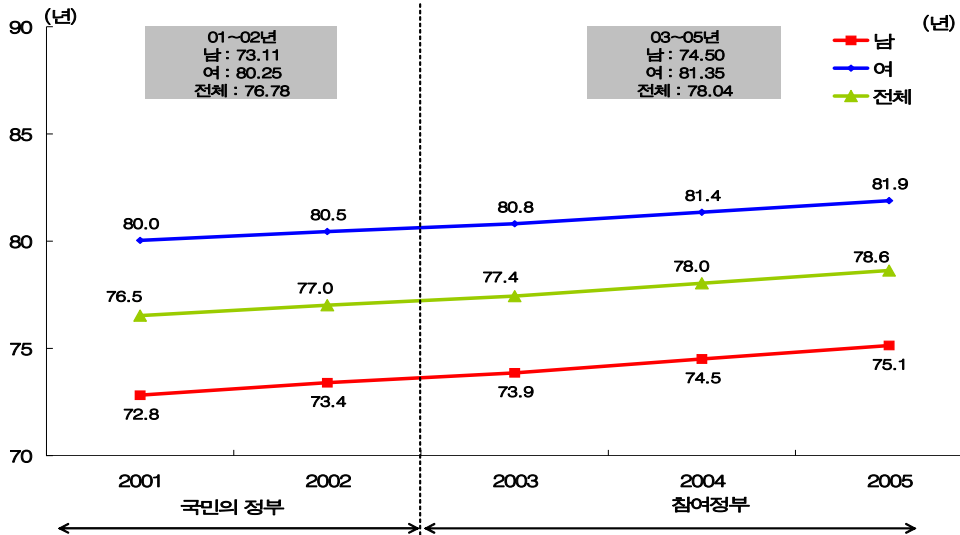
주 : 암환자 건강보험 급여율에 관한 자료는 2004년과 2005년 통계자료만 존재.
 자료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본인부담 실태조사」, 각 년도

14. 기대여명

- 출생시 기대여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 현재 78.7세에 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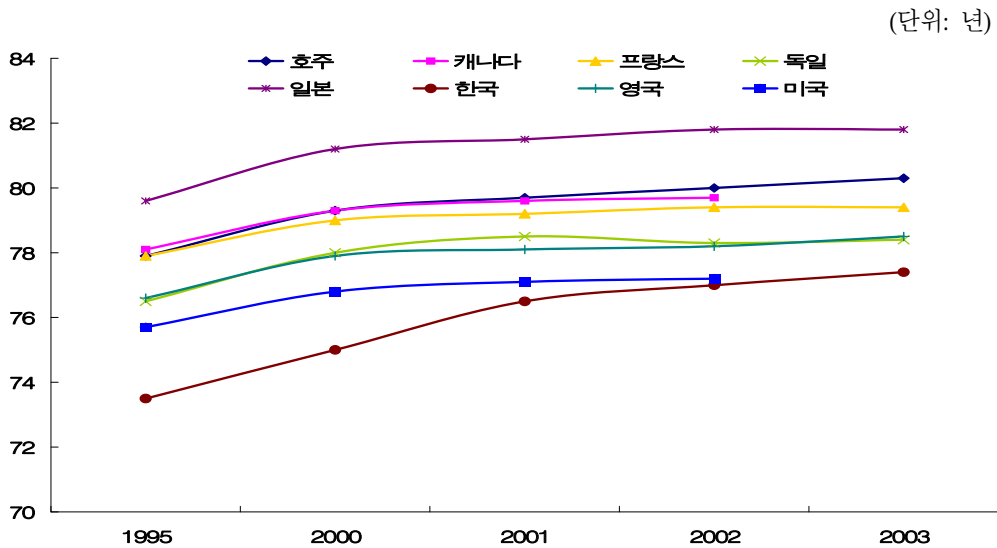
— 2005년 기준으로 남성은 75.1세, 여성은 81.9세로 남녀차이는 6.8세로 나타남.
 — 출생시 기대여명은 초고령 국가인 일본보다는 낮으나 다른 선진 국가와는 1~2세의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건강수명이 이상적인 지표이나 아직 공식적으로 생산되지 않음.

[그림 2-11] 출생시 기대여명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2005.

[그림 2-12] 출생시 기대여명의 국제비교



자료 : OECD Health Data 2005, Oct 2005.

15. 아동안전사고사망률

□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아동보호는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간주되며, 이에 참여정부는 '아동안전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아동안전의 보장을 강력히 추진함.

- 아동안전사망자 수는 2001년 1,789명, 2002년 1,496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에는 598명으로 낮아짐.
- 안전사고사망률은 2001년 13.3%, 2002년 11.4%에서 2005년에는 4.8%로 감소함.

〈표 2-9〉 아동안전사고사망률

(단위 : 명, 인구 십만명당)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수	1,789	1,496	1,374	1,090	598
전체아동수	13,402,161	13,068,042	12,799,354	12,609,414	12,388,713
안전사고사망률	13.3	11.4	10.7	8.6	4.8

주 : 1)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는 「사망원인통계」에 근거한 운수사고, 추락,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익사, 전류/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기압에 노출, 연기/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연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 연도.

제 2 절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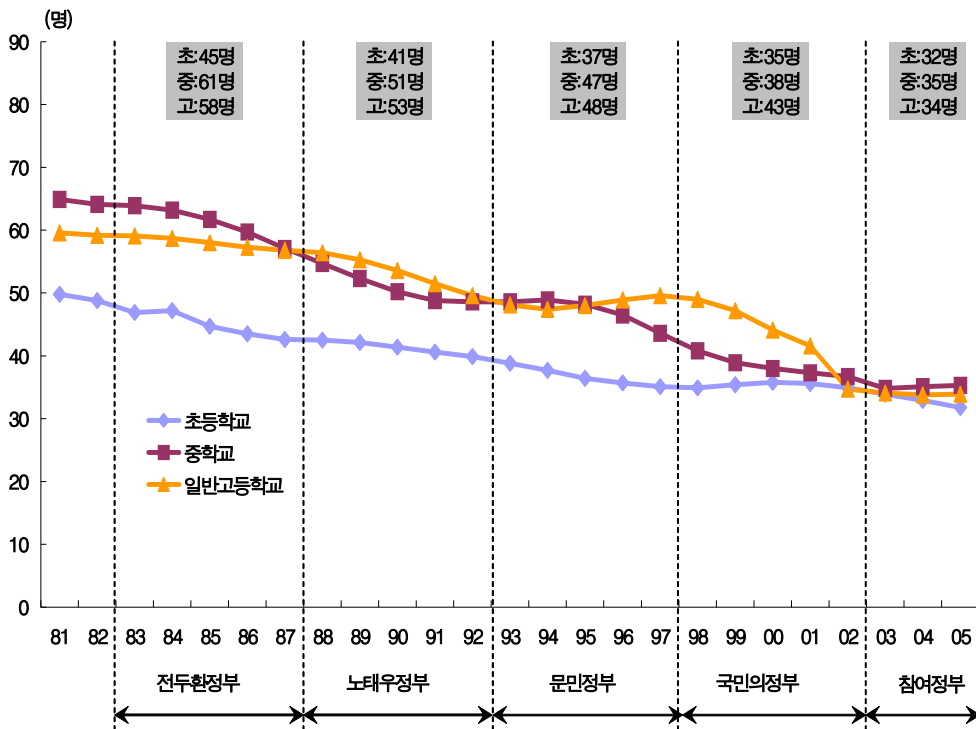
1.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 국민의 정부 기간 중 잠시 증가하였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참여정부 기간 중에 큰 폭으로 감소함.

- 문민정부 초기인 1993년 38.8명에 달하던 학급당 학생수가 2006년에는 30.9명으로 20.4%가 감소함.

□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문민정부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참여정부 기간에는 평균 34~35명 수준으로 감소함.

[그림 2-13]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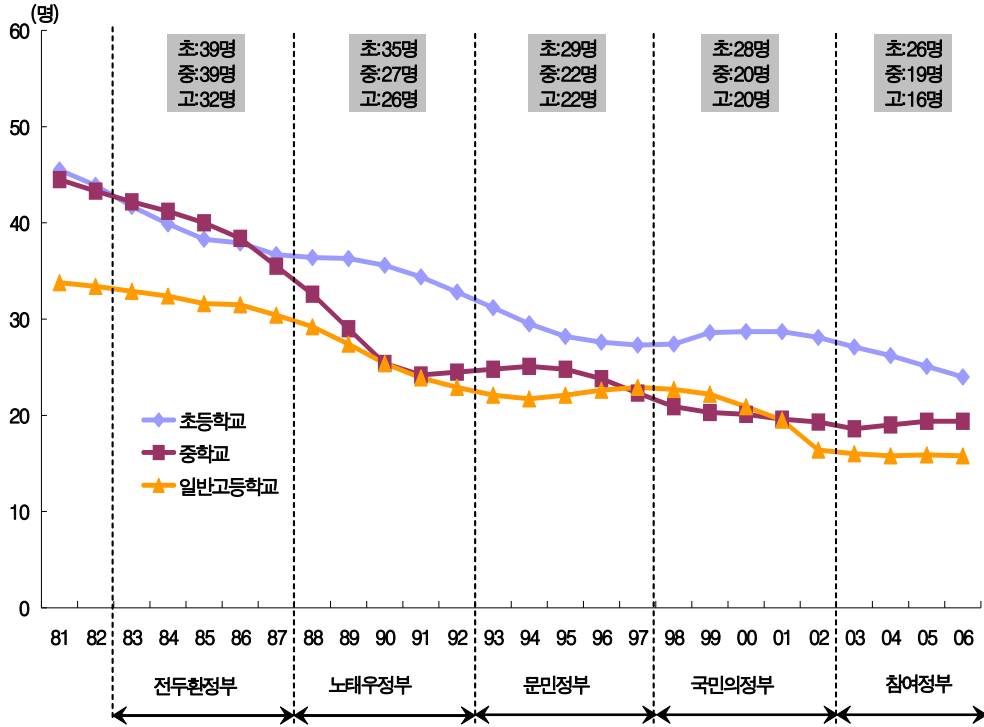
주 : 수치는 각 정부기간의 평균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각 년도

2. 초·중·고등학교 교사당 학생수

□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당 학생수도 과거의 감소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 교사당 학생수의 감소는 교사의 확충과 더불어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의 감소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됨.

[그림 2-14] 초중고 교사당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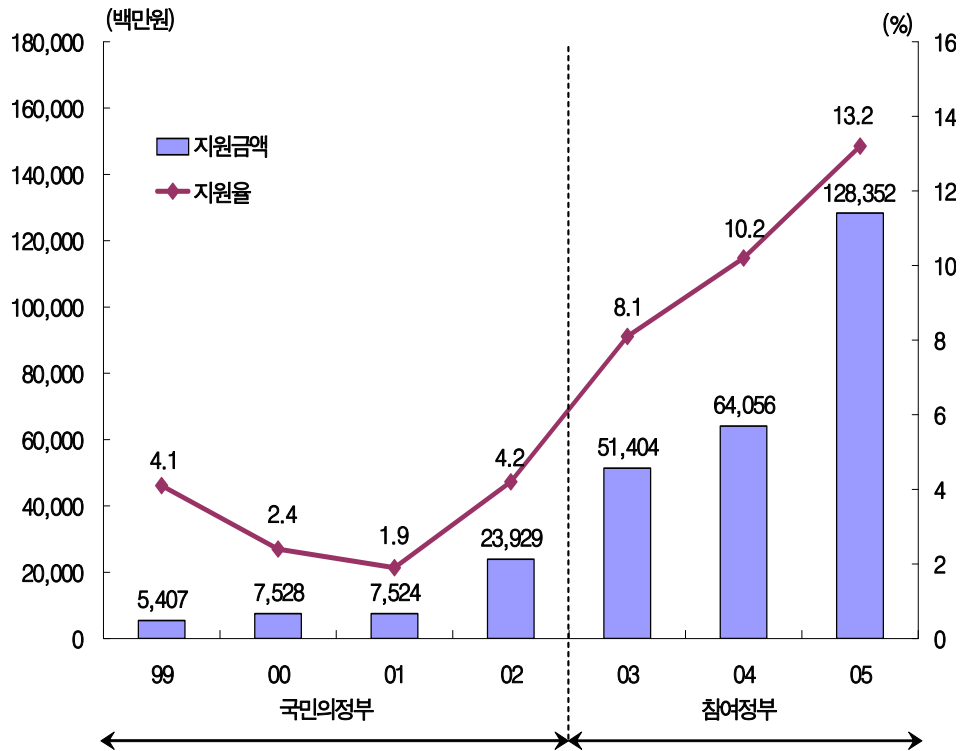
주 : 수치는 각 정부기간의 평균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각 년도

3. 저소득층 무상교육비

□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및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을 시작으로('04) 참여정부 기간 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5년 13.2%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음.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이하의 가구(만5세) 및 70%이하의 가구를 지원함 (만3,4세, '06).

[그림 2-15]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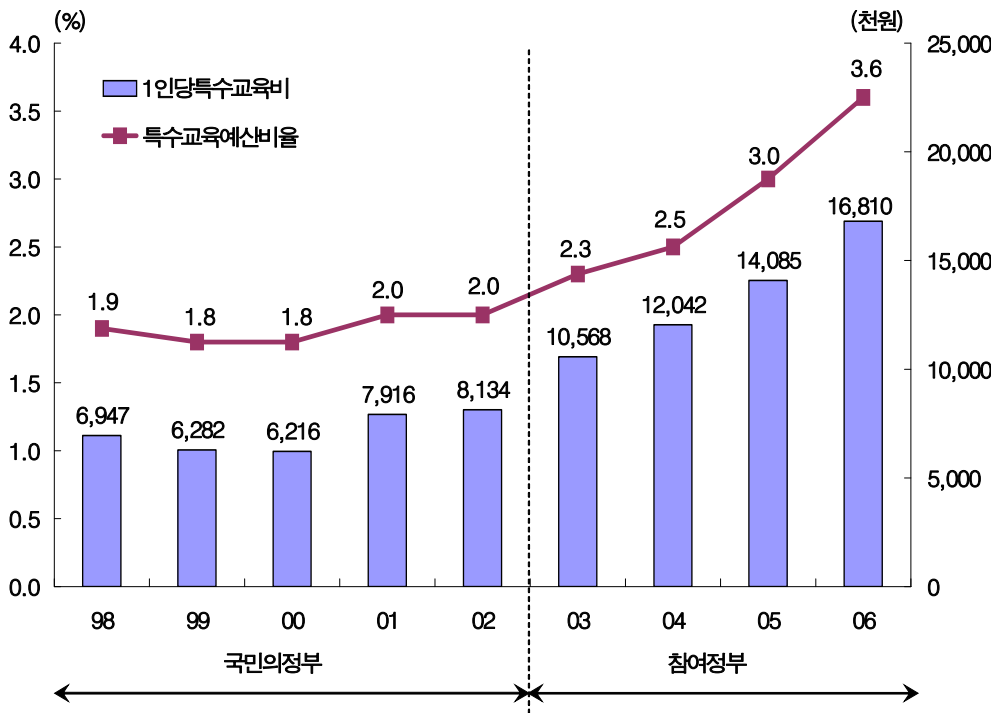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 주요 업무 계획

4.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

□ 『장애인 지원 종합계획』('06.9.4) 및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03~'07) 수립·시행으로 특수교육을 확대하였음.

— '06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가 1,681만원까지 증가함.

[그림 2-16]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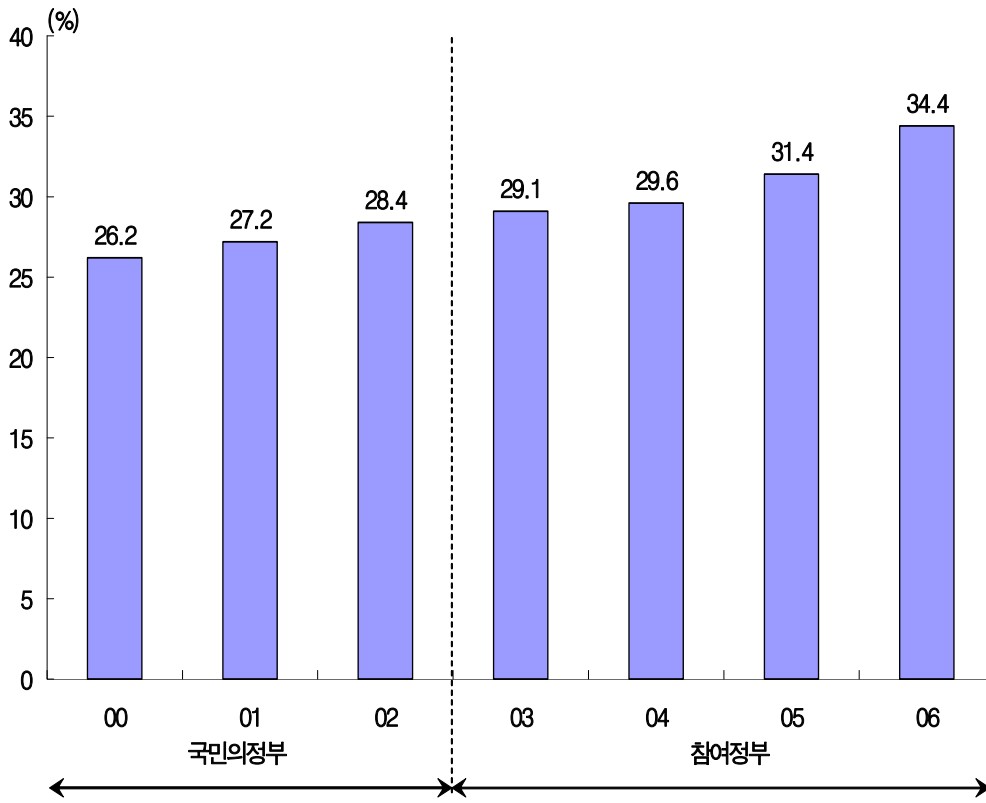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각 년도

5. 유아 취원율 및 대학진학률

□ 2002년 28.4%였던 유치원취원율이 2006년에는 34.4%로 큰 폭으로 증가함.

— 참여정부는 2004년에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1999년부터 시작된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음.

[그림 2-17] 유치원 취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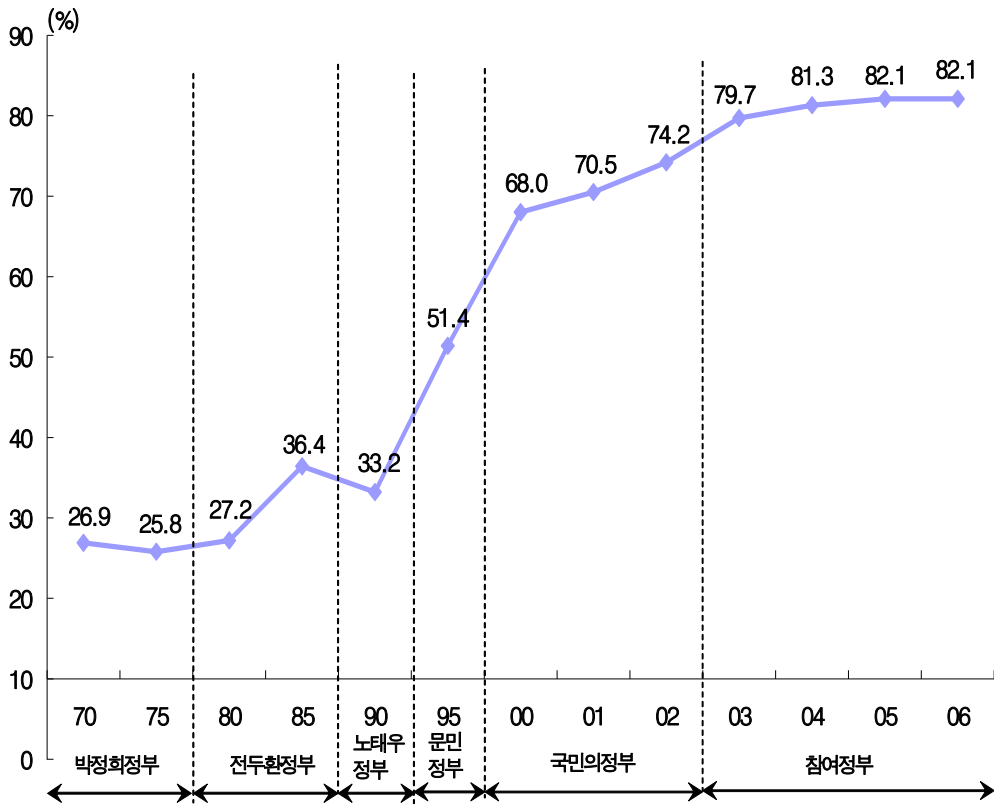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각 년도

□ 참여정부에 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진학률(82%)을 달성하여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실현함.

— 대학진학률 : 27.2%('80) → 68%('00) → 82.1%('06)

[그림 2-18] 대학 진학률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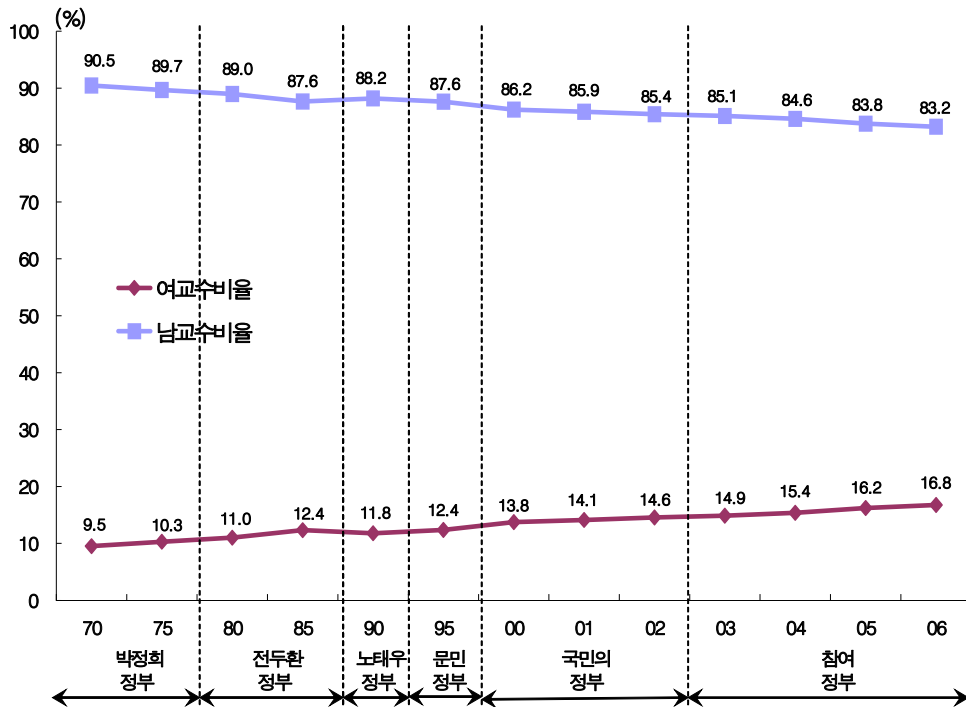
6. 대학 교원 성비율

□ 참여정부는 양성평등의 교육여건 조성 및 여성의 직업세계 진출을 지원해옴.

— 이로써, 고등교육기관의 여교원 비율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6년에는 전문대학 27.9%, 대학 16.8%에 이르고 있음.

- 참여정부의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추진이 여교원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침.
- 4년제 대학의 경우 2002년 대비 2006년 교원증가율이 전체 약 118%인데 남교원의 경우 약 115%, 여교원의 경우 약 136%로 여교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음.

[그림 2-19] 4년제 대학 교원 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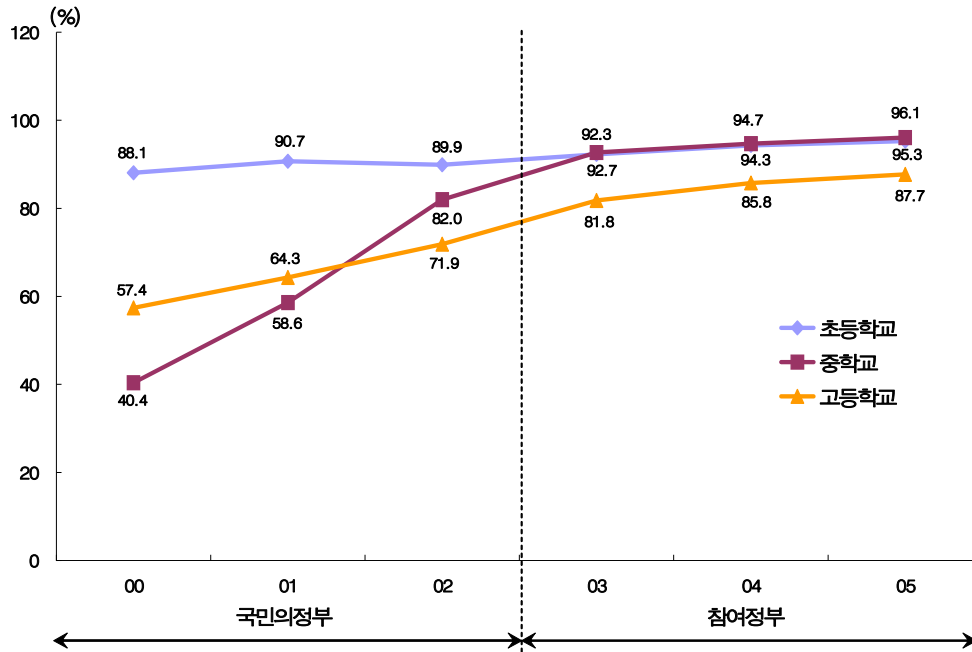
주 : 여교원비율은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에서의 여교원 비율임.

7. 초·중·고 급식이용학생 비율

□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이용학생 비율은 참여정부에 들어와 모두 큰 폭으로 증

가하여 2005년의 경우 고등학교 87.7%, 중학교 96.1%, 초등학교 95.3%에 이르고 있음.

[그림 2-20] 초·중·고 급식이용학생 비율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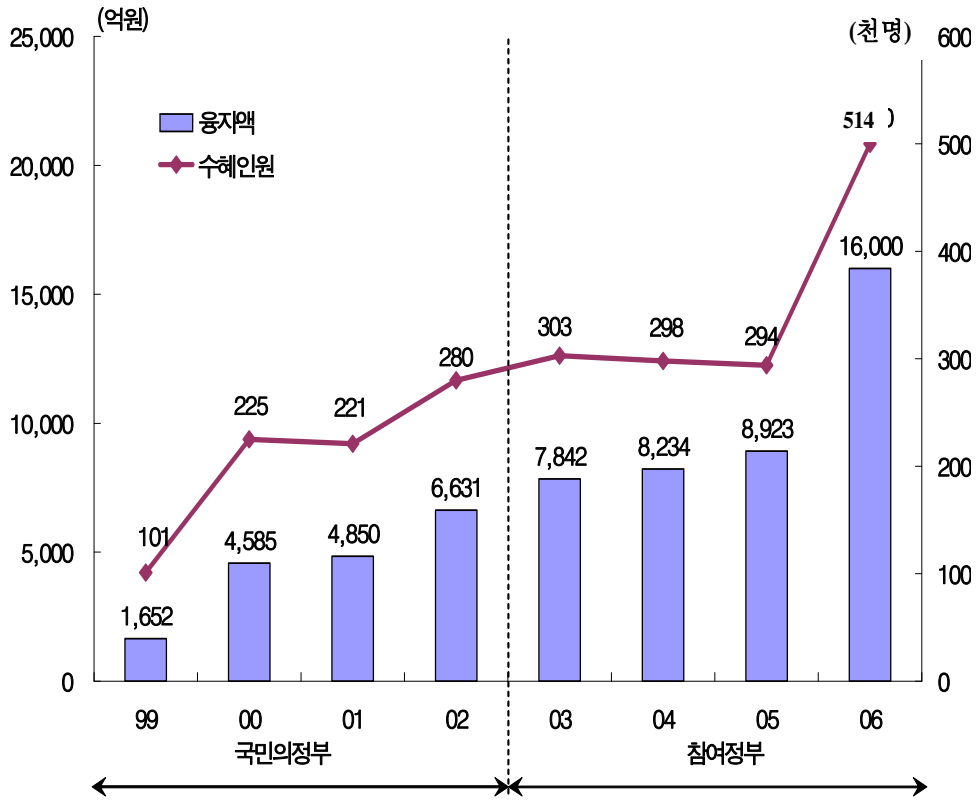
8. 대학 학자금 대출

□ 능력과 의욕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보증 방식의 학자금 대출('05년 2학기~) 및 전문대학 근로장학금 제도를 도입함('05).

— 학자금 수혜 인원과 규모 : 30.3만명, 747억원('03) → 51.4만명, 1조6천억원('06)

— 전문대 근로장학금 지원대상과 규모 : 4,000명, 80억('05) → 5,000명, 100억('06)

[그림 2-21] 대학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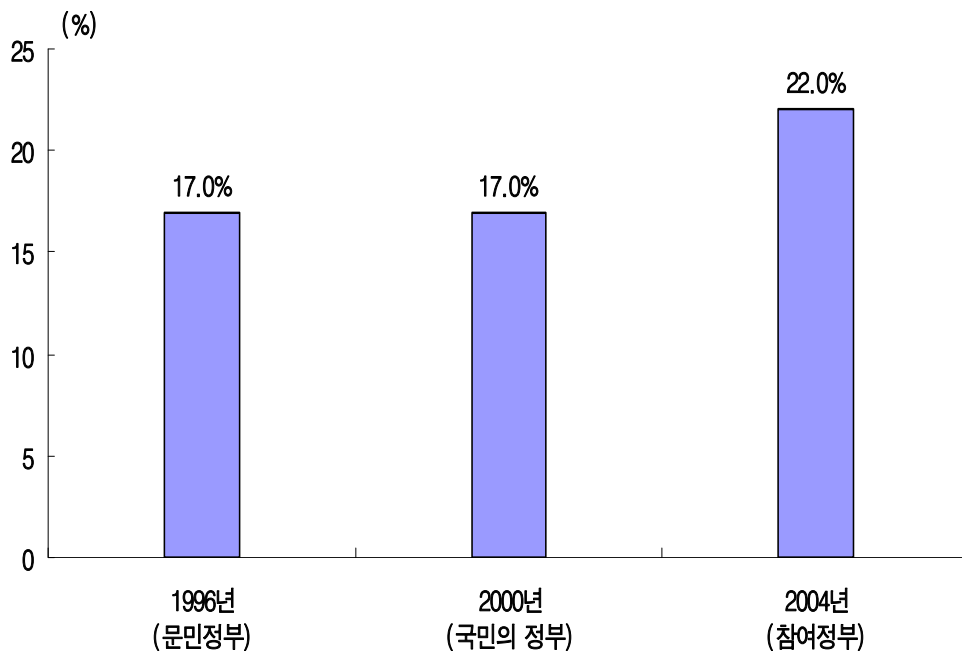
제 3 절 인적자원개발

1. 평생학습

□ 국민의 지적 능력과 창의력 배양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이 중요함.

— 참여정부 기간인 2004년 현재 직업훈련, 학원수강 등과 같은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가구원의 비율이 22%까지 상승하여 과거의 17%에 비해 현저히 높아짐.

[그림 2-22] 평생학습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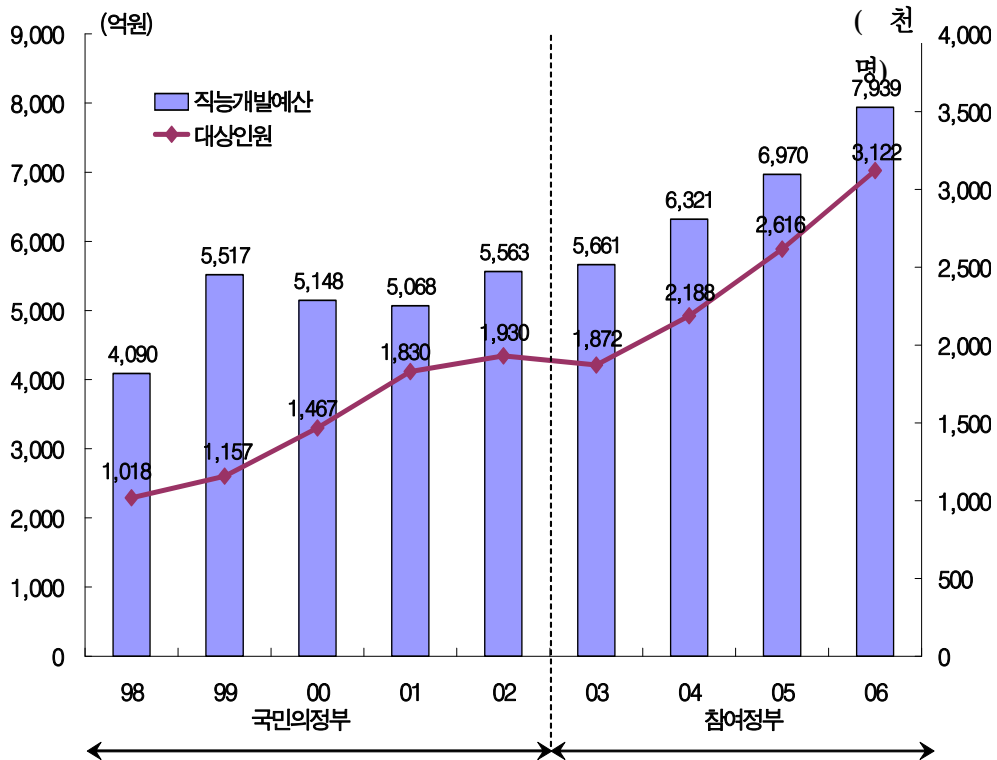
주 : 평생학습참여율 = (평생학습참여 가구원수 / 총 가구원수(16~64세)) × 100
 자료 : 통계청 KOSIS, 교육(사회통계)

2. 직업능력개발 지원

□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참여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한 결과 직업능력개발지원 예산을 받은 대상자 수도 크게 증가함.

— 2006년에는 직업능력개발지원을 위해 7,9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정부 때보다 2,000억 이상이 늘어난 것임.

[그림 2-23] 직업능력개발지원 예산 및 대상인원



주 : 직업능력개발지원 예산에는 실직자 및 취약계층 훈련, 사업주 및 재직자 훈련, 인력부족분야 훈련,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훈련 예산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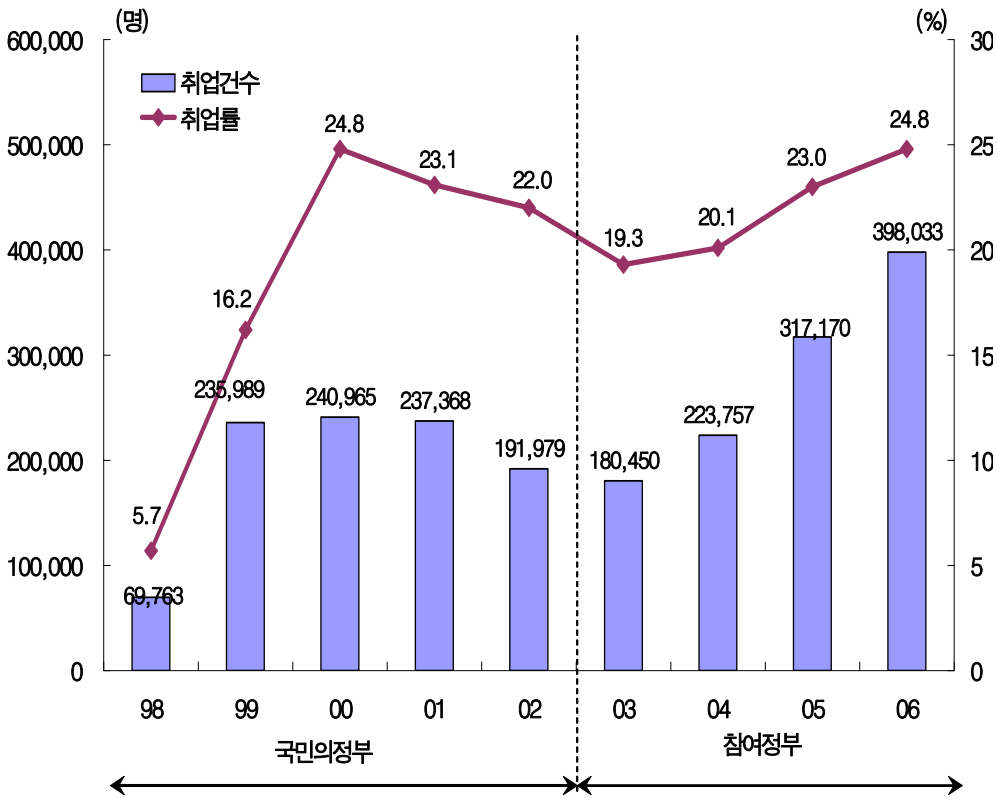
자료 : 노동부, 각 년도

3. 고용안정 지원

□ 참여정부는 고용안정과 필요한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고용안정센터 활성화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

— 고용안정센터의 구인·구직활동을 통해 취업한 건수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현재 약 40만 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업률도 24.8%까지 증가함.

[그림 2-24]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취업 현황



주 : 취업률 = 취업건수/구직자수×100

자료 : 노동부, 각 년도

제 4 절 여성·보육

1. 여성권한척도

□ 여성권한척도는 여성의원 비율, 여성행정관리직, 여성전문기술직, 남녀소득비 등에 의하여 산출됨.

- 참여정부 직전인 2002년에는 조사대상국 64개국 중 61위로 최하위권 이었으나, 2005년에는 80개국 중 59위, 2006년에는 75개국 중 53위로 개선됨.
- 단, 조사대상 국가는 매년마다 UN에 자료를 제출하는 국가 중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기준이 없음.

〈표 2-10〉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단위: 점, %)

년도	순위/대상국가	점수	여성의원 비율	여성 행정관리직	여성 전문기술직	남녀 소득비
2002	61/64	0.378	5.9	5.0	34.0	0.45
2003	63/70	0.363	5.9	5.0	34.0	0.46
2004	68/78	0.377	5.9	5.0	34.0	0.46
2005	59/80	0.479	13.0	6.0	39.0	0.48
2006	53/75	0.502	13.4	7.0	38.0	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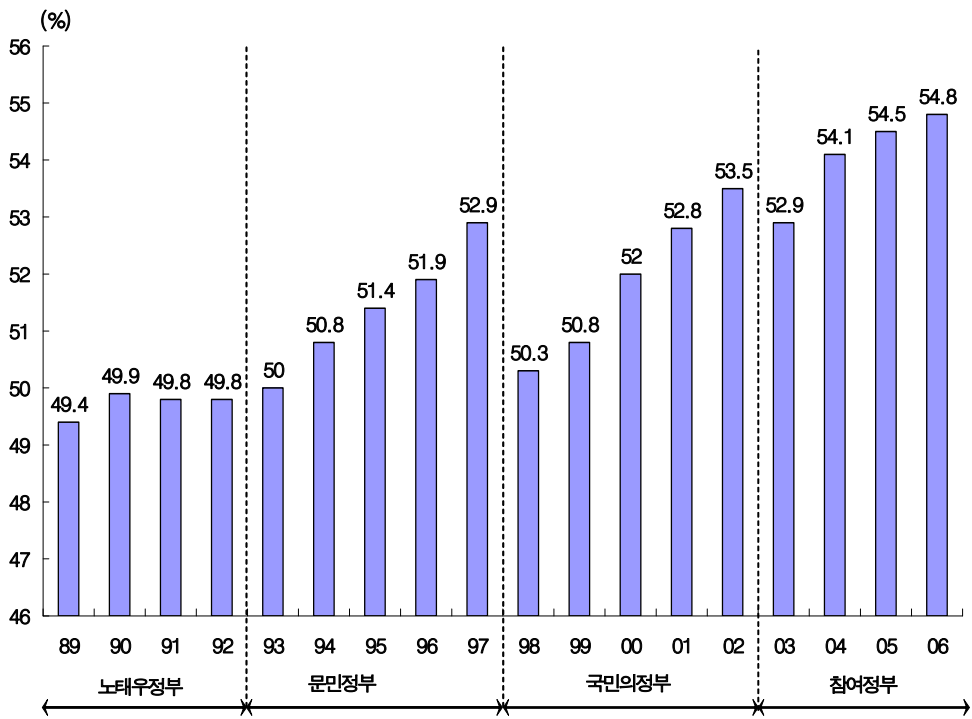
자료 : UN, 「Human Development Report」, 각 년도

2.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93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섰으며, 참여정부에 들어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함.

— 참여정부 초기에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2004년부터는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54.8%에 달하고 있음.

[그림 2-25]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주 : 1989년~1999년도는 1주 기준, 2000년~2006년도는 4주 기준

자료 : 노동부

3. 여성폭력대응예산 증가율

- 여성폭력대응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참여정부 들어 성매매, 성폭력과 관련하여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정책을 강화함.

- 참여정부 직전인 2002년에는 87억 2백만원 있었으나 2006년 397억9천6백만원으로 최고로 증가하였다가 2007년에는 391억4천6백만원으로 약간 감소함.
- 성매매와 관련한 예산은 2002년에는 31억8천6백만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196억9천6백만원으로 무려 6.2배나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181억8천7백만원으로 약간 감소함.
- 가정폭력·성폭력과 관련한 예산은 2002년 55억천6백만원에서 2007년에는 209억6천2백만원으로 약 3.8배 증가하였음.

〈표 2-11〉 여성폭력대응예산 증가율

(단위 : 백만원)

년도	계	성매매	가정폭력·성폭력
2002	8,702	3,186	5,516
2003	9,212	2,877	6,335
2004	20,752	7,329	13,423
2005	36,787	19,220	17,567
2006	39,796	19,619	20,177
2007	39,149	18,187	20,962

주 : 가정폭력·성폭력 예산은 성희롱예산 제외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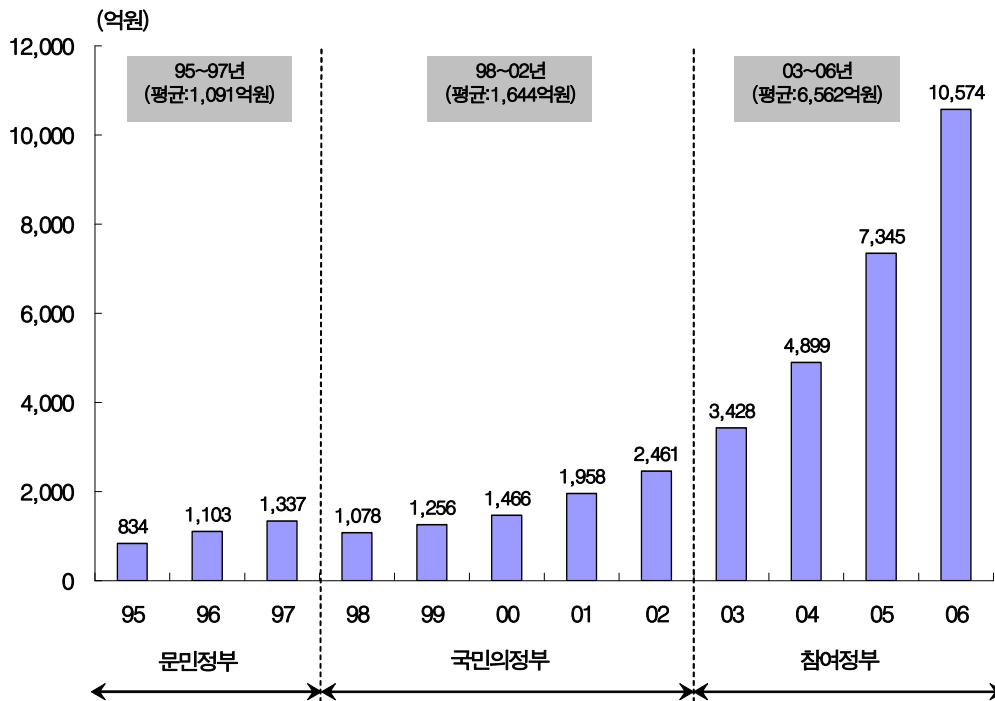
4. 육아지원 예산

- 육아지원예산은 국민의 정부 2,461억원('02)에 비해 10,574억원('06)으로 약 4배가 증가되는 괄목할 만한 정책의지를 보임.

※ 육아지원예산은 유치원, 보육시설 등 육아관련 모든 시설 등에 투자하는 비용을 의미함.

-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369만원)까지 확대됨.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제도를 도입함('03).

[그림 2-26] 육아지원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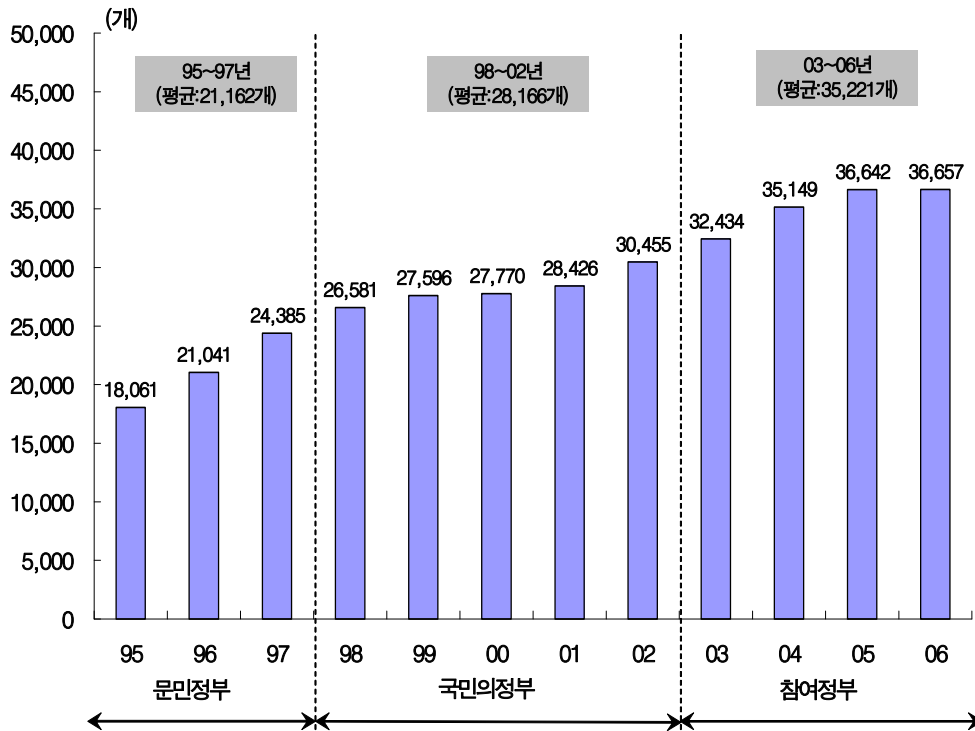
자료 : 기획예산처, 내부자료, 2006.

5. 육아지원시설 수 및 이용아동 수

□ 문민정부 이후 육아지원시설수 및 이용아동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참여정부에서 2배에 달함.

- 그러나 육아지원시설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육아지원시설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고 공공보육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 국공립시설비율은 16.3%, 국공립시설 이용아동수는 15.1%에 불과함.

[그림 2-27] 육아지원시설수



주 : 육아지원시설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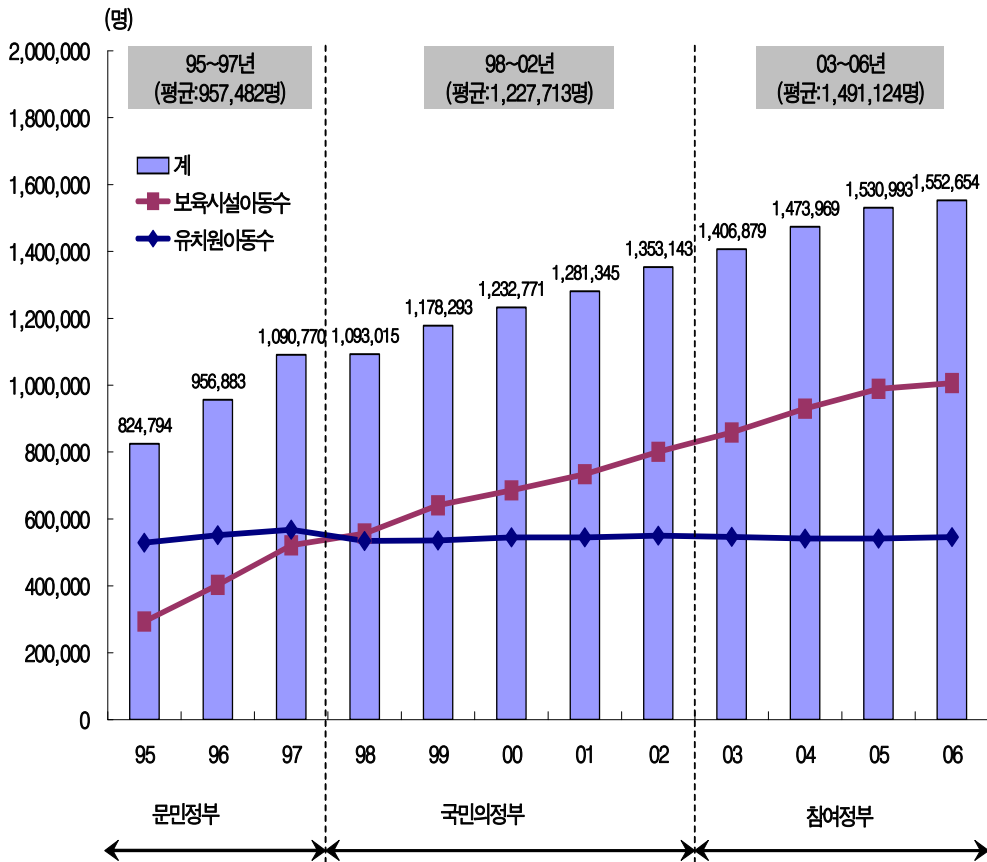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2006.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2006.

-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확대로 인해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각 가정 당 자녀수의 감소로 인해 유치원 아동수는 정체상태에 놓여있음.

— 각 지역자치단체별로 영아보육, 장애아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방과후 보육 등 보육시설 지원 사업의 확대와 민간보육시설 지원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2-28] 육아지원시설 이용아동수



자료 : 여성가족부,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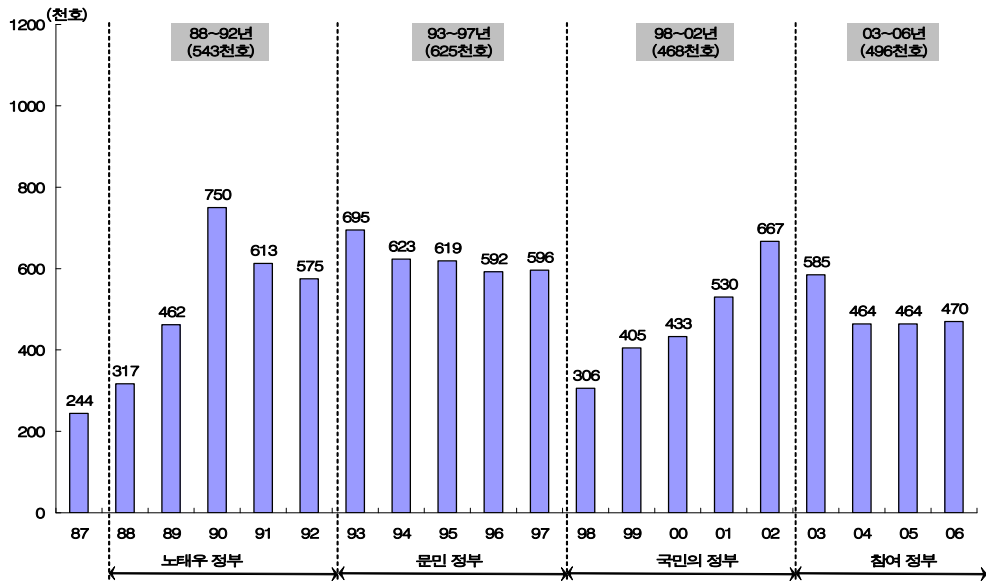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현황 및 내부자료, 2006.

제 5절 주거복지

1. 주택건설 추이

- 우리나라 주택건설실적은 1988년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 약 75만호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1998년 외환위기때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참여정부기간(2003~2006년) 동안 연간 약 50만호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함.
 - 주택건설실적은 노태우 정부 평균 54만호, 문민정부 63만호, 국민의 정부 47만호, 참여정부 50만호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
- 특히, 2006년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물량은 주택소요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2007~2010년 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36.4만호를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기본수요(26만호) 및 총소요(30만호)를 크게 상회하여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29] 주택건설 추이(천호)



자료 : 건설교통부,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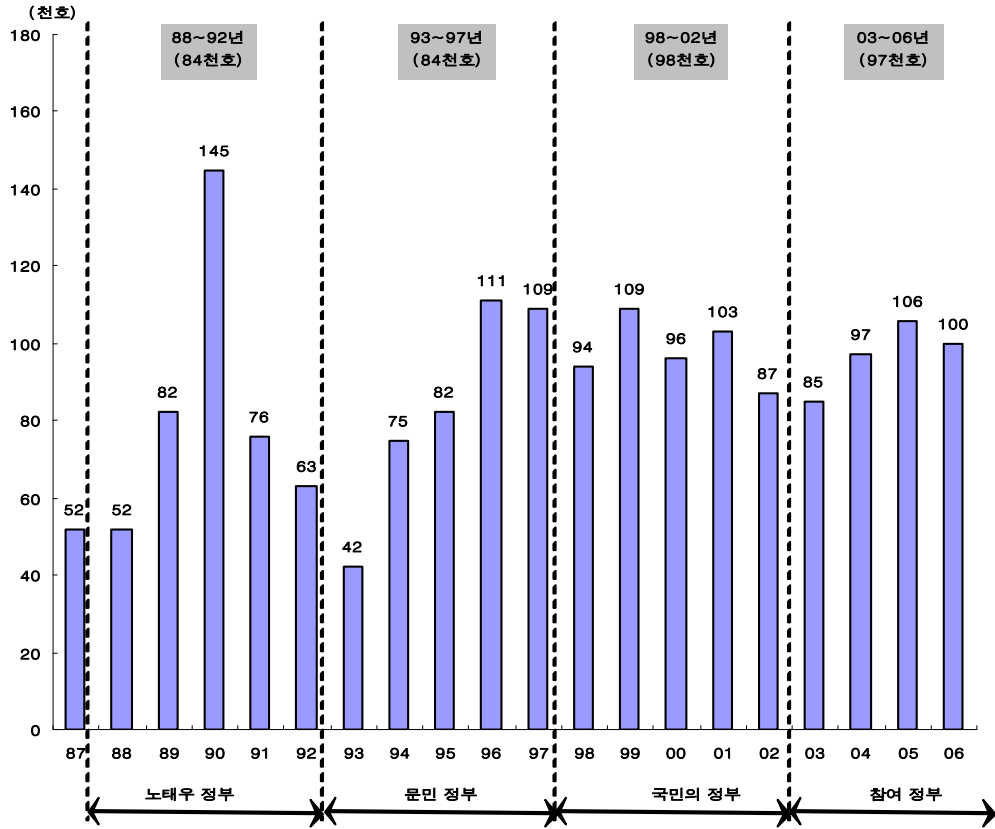
2. 공공임대주택 건설추이

□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10만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이후 임대주택건설 비율은 20%이상 수준을 유지함.

— 노태우 정부 평균 8만4천호, 문민정부 8만4천호, 국민의 정부 9만8천호, 참여정부 9만7천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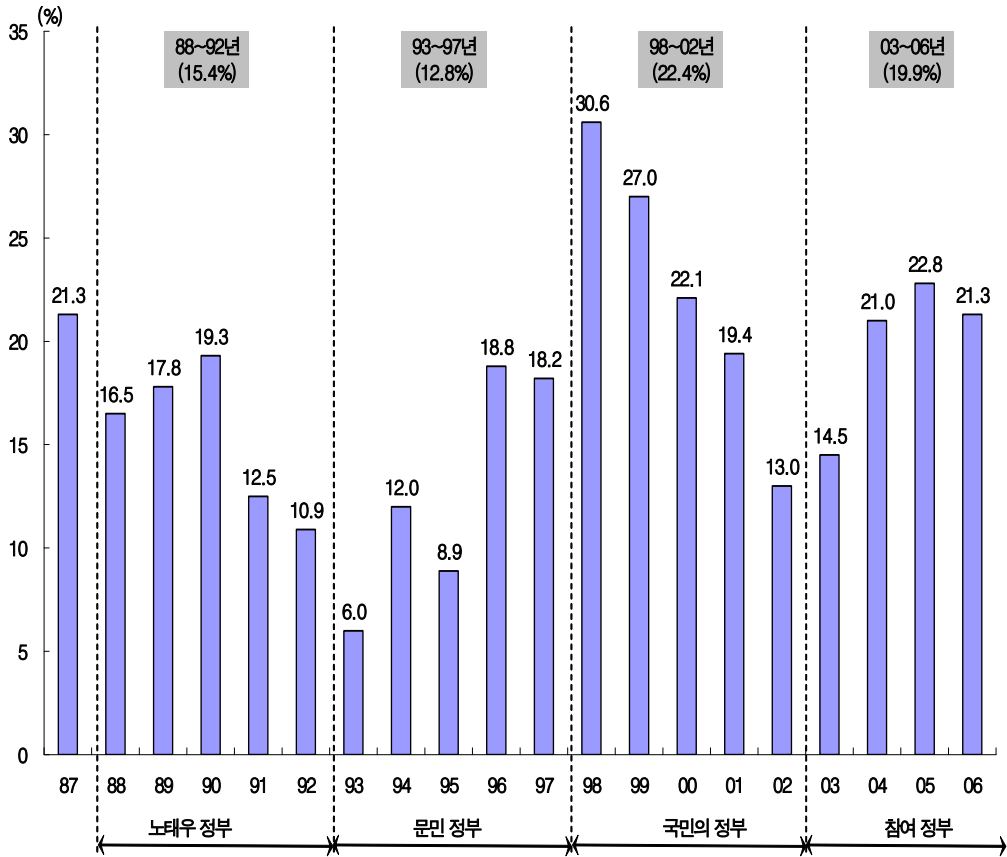
— 특히, 국민의 정부 이후 복지와 분배정책의 확대로 인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참여정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계승하여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그림 2-30] 공공임대주택 건설추이(천호)



자료 : 건설교통부, 각 년도

[그림 2-31] 임대주택 건설비율



주 : 임대주택 건설비율 = 임대주택 / 주택건설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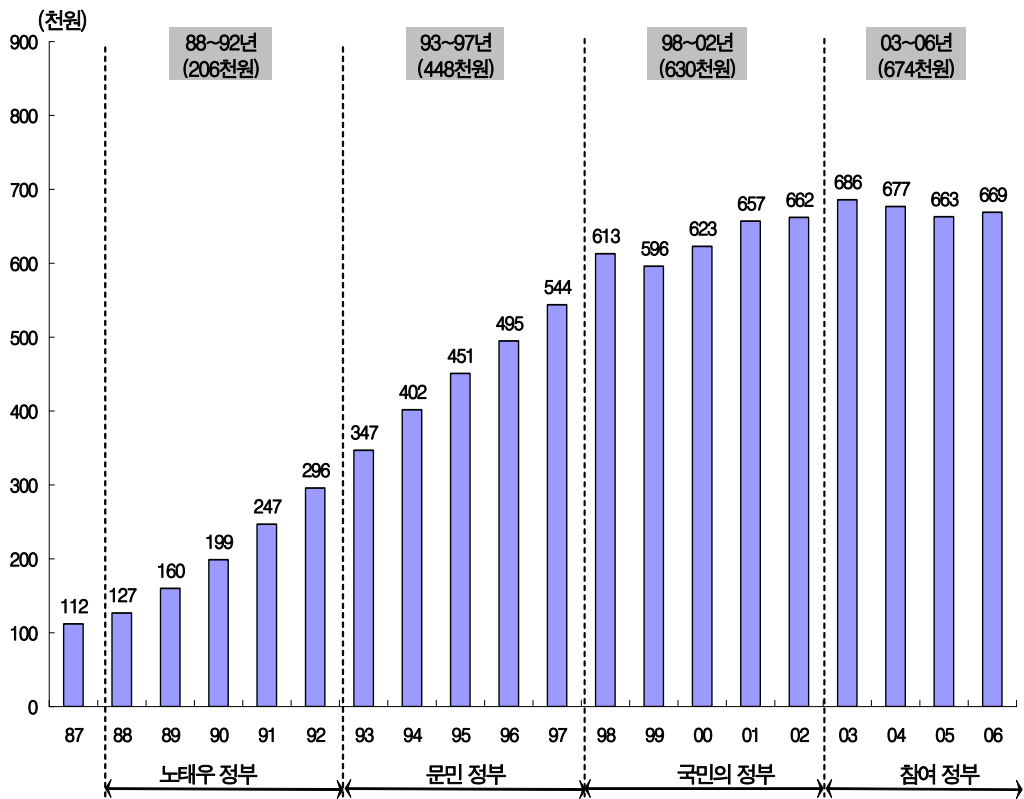
자료 : 건설교통부, 각 년도

3. 주거비지출

- 1998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거비지출은 그 이후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2006년 주거비 지출은 월 67만원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함.

— 특히, 소비지출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국민의 정부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6년 현재 30.8%로 낮은 수준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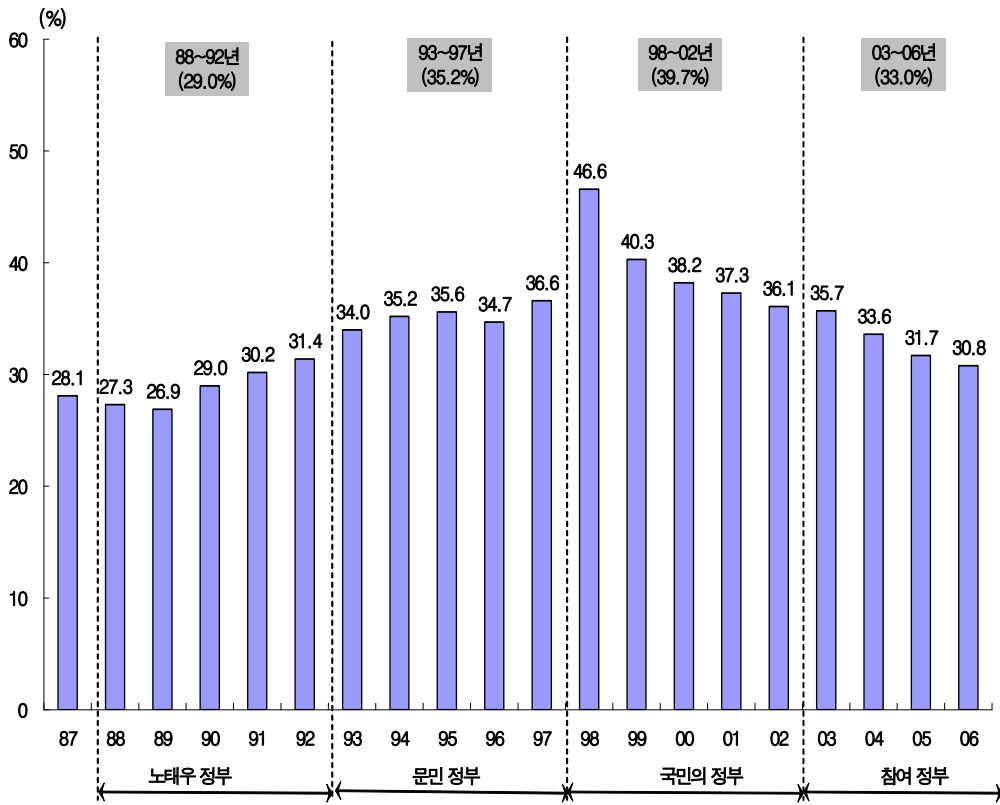
[그림 2-32] 주거비지출 추이(1979년~2006년)



주 : 주거비=월세+보증부월세평가액+전세평가액+자기평가액+주택설비수선재료+기타주거비(공동주택관리비, 화재보험료, 주택거래수수료, 방법비 및 해충퇴치비 등). 단, 소유자거주주택이나 전세주택 등의 경우 보증부월세평가액이나 전세평가액, 자기평가액 등을 월세로 환산하여 산정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감」, 각 년도

[그림 2-33] 주거비 지출률(주거비/소비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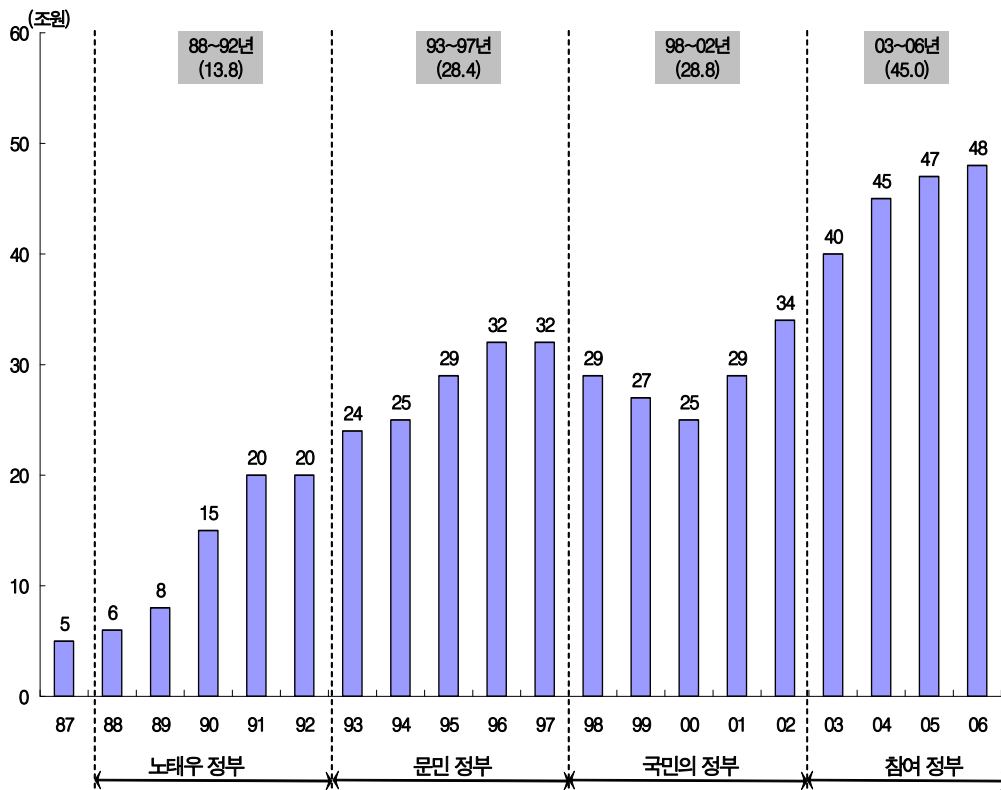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4. 주택투자액 추이

□ 주택투자액은 2000년 25조원을 기록한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48조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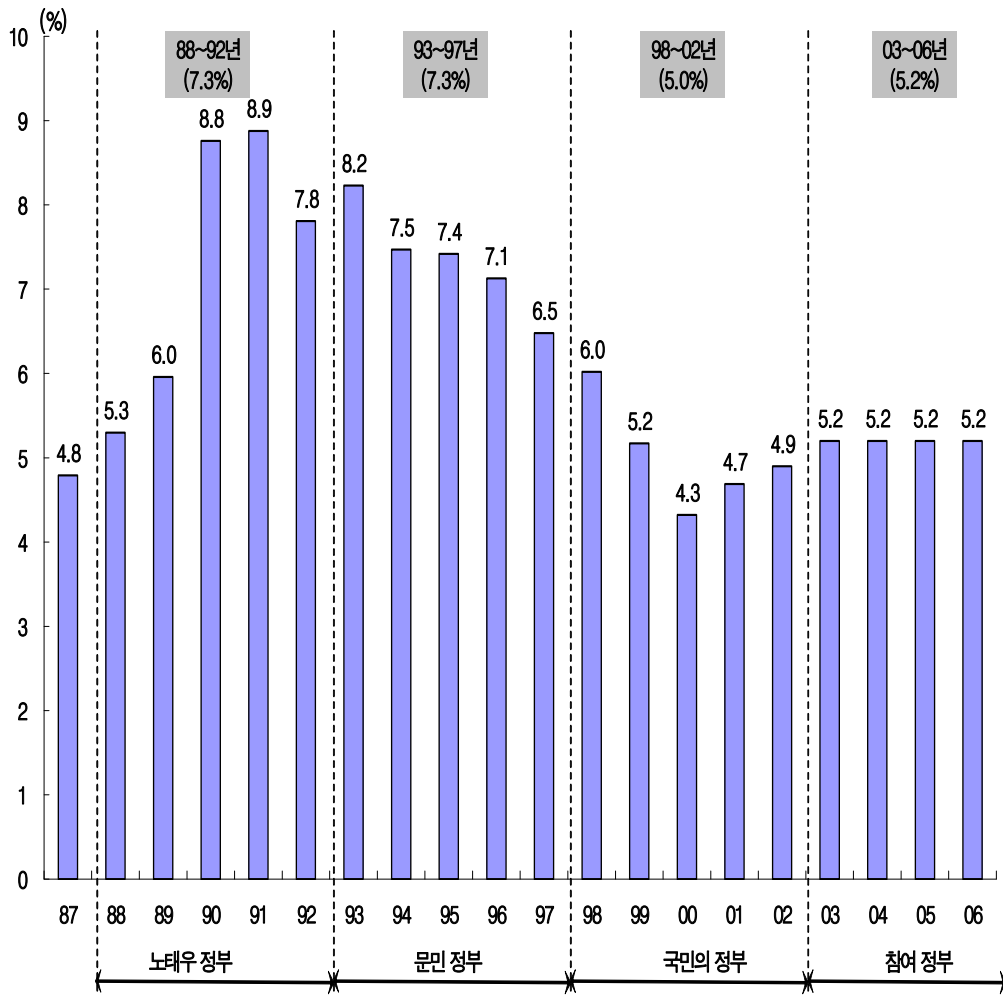
— GDP대비 주택투자액 비율도 2003년 이후 5.2%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그림 2-34] 주택 투자액 추이(1970~2006년)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그림 2-35] 주택투자율(주택투자액 / 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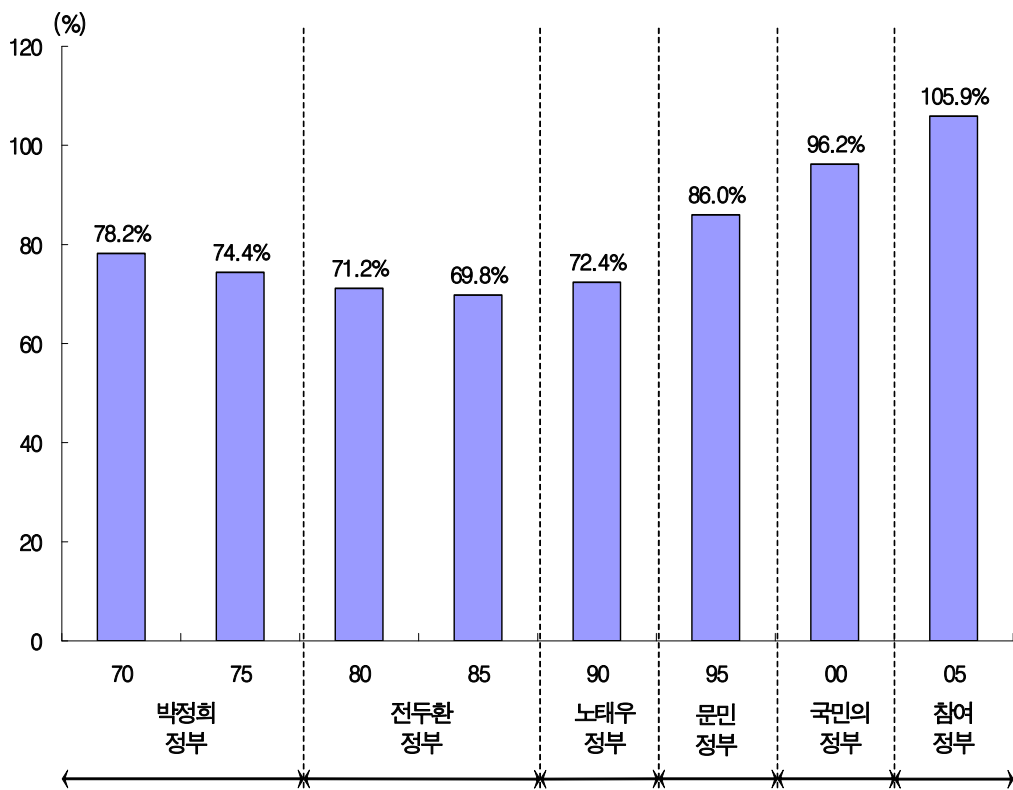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5. 주택보급률 추이

□ 2000년까지 100%를 밑돌던 주택보급률은 2005년 105.9%를 기록하였으며, 인구천 명당 주택수도 279.7호로 2000년 대비 12.5%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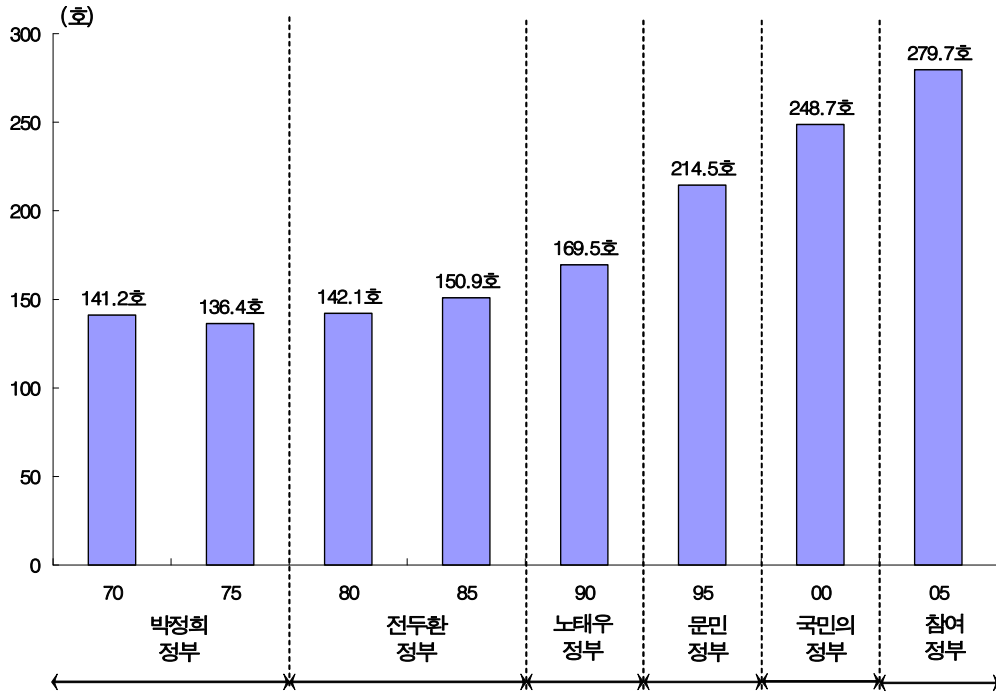
— 인구 천명당 주택수 추이를 보면 1985년 150.9호, 1995년 214.5호, 2005년 279.7 호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그림 2-36] 주택보급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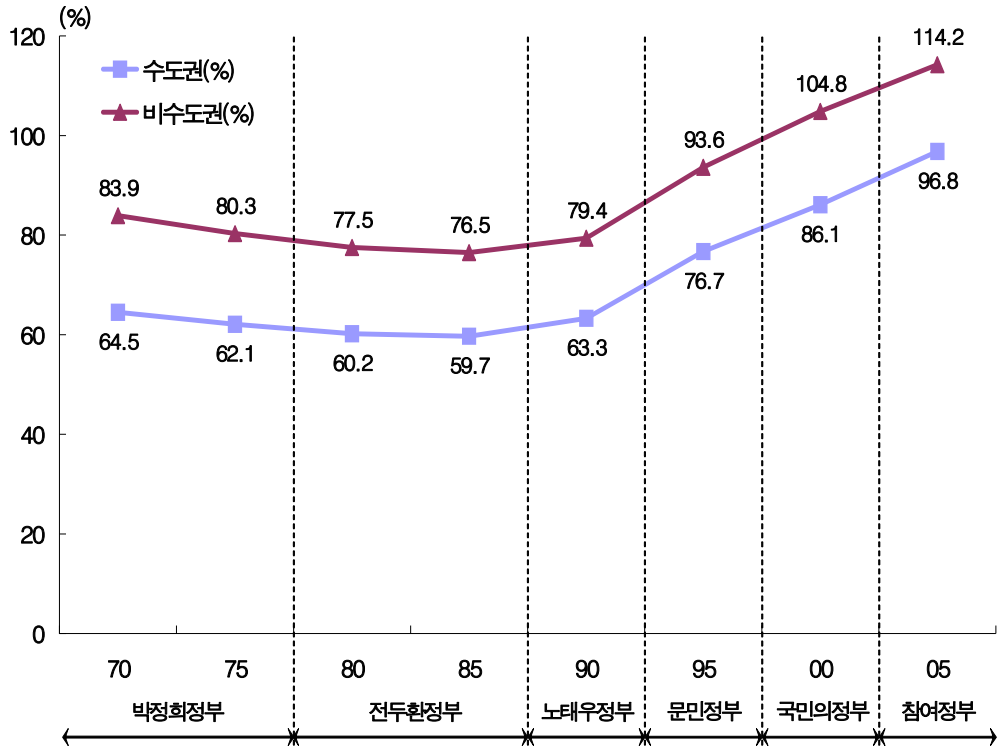
[그림 2-37] 인구 천명당 주택수 추이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 지역별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수도권 96.8% 및 비수도권 114.2%로 2000년 대비 각각 10.7% 및 9.4% 상승하였음.

[그림 2-38] 지역별 주택보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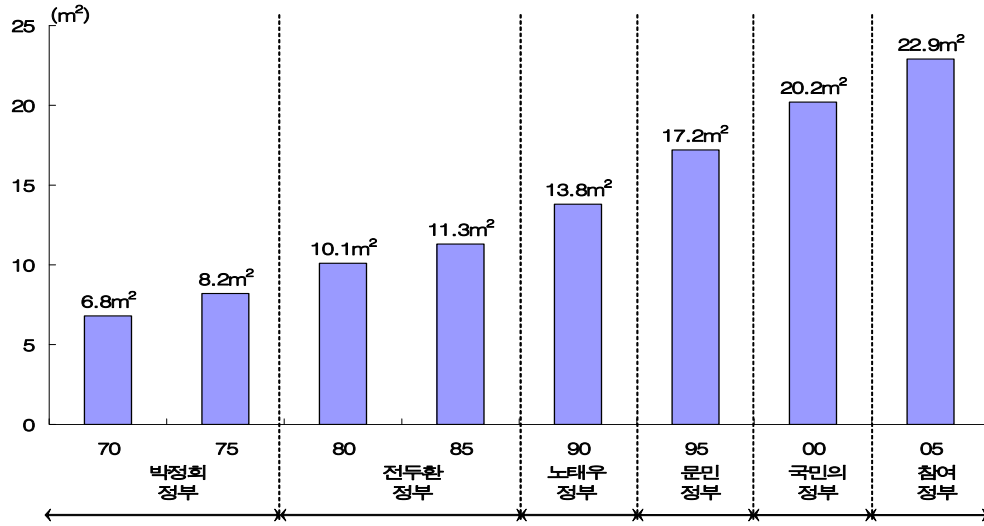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6. 주택공급 규모

□ 1인당 주거면적은 2000년 20.2㎡/인에서 2005년 22.9㎡/인으로 13.4%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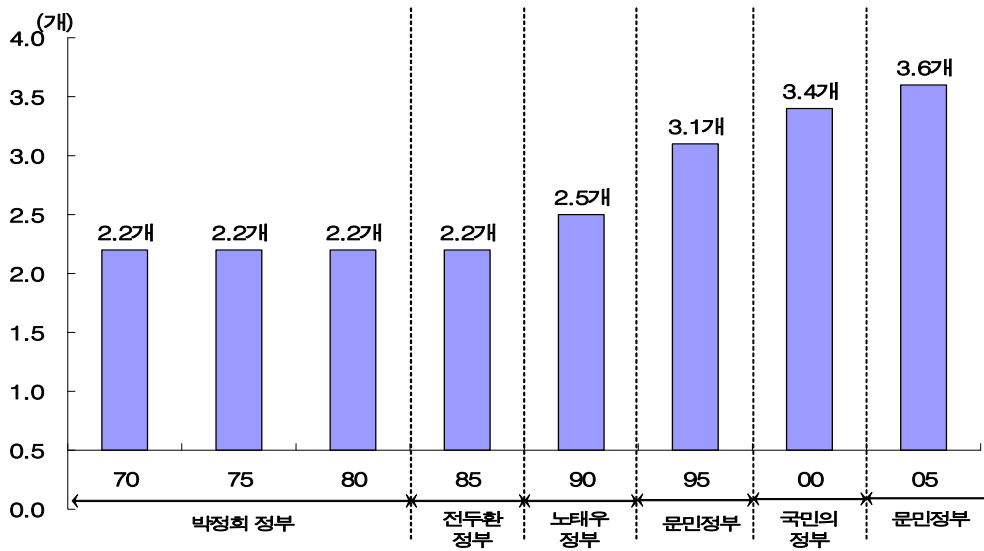
— 가구당 평균사용 방수도 2000년 3.4개에서 2005년 3.6개로 증가하였음.

[그림 2-39] 1인당 주거면적 추이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그림 2-40] 가구당 평균사용 방 수 추이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제 6 절 문화·체육

1. 문화기반시설 수

□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공연장 등 문화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2002년 1,101개소에서 2006년에는 1,582개소로 참여정부 4년 동안 43.7%가 증가하였음.

〈표 2-12〉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 : 개소)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705	804	870	928	993	1101	1198	1266	1455	1582
박물관	180	192	206	220	235	276	289	306	358	399
미술관	34	40	43	46	53	60	65	74	80	88
공공 도서관	330	370	400	420	437	462	471	487	514	564
공연장	161	202	221	242	268	303	373	399	503	531

주 : 1) 사립·대학박물관은 등록관만 대상이며 자료는 2006. 12. 31 기준임.

2) 미술관: 각 시도에서 관할 구역내에 등록된 미술관을 대상함

3) 공공 도서관: 자료수는 간행물(중)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말하며

4) 공연장은 등록공연장을 의미하며 '98~'01년까지의 자료는 증가추세에 의한 추정치임

□ 1997년부터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립박물관 건립을 지원(건립비의 30% 국고보조)하여 최근 4년간 등록박물관수는 약 44% 증가하였음.

- '02년 276개소 → '06년 399개소로 증가(44%)
- 그러나 박물관 1개소 당 인구수는 한국 13.4만명으로 미국 6만명, 프랑스 4.6만명, 일본 3.7만명, 독일 2만명 등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함.
- 1999년부터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립미술관 건립을 지원 (건립비의 30% 국고보조)하여 최근 4년간 지방의 미술관이 약 47% 증가하였음.
 - '02년 60개소 → '06년 88개소로 증가하였음.
- 지식정보 인프라구축의 중요성,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증가 및 정부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확대 (건립비의 20% 국고지원)로 최근 4~5년간 공공도서관의 건립이 약 22% 증가하였음.
 - 1997년 330개소 → '02년 462개소 → '06년 12월 현재 564개소
 -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도서관 1개소당 인구수가 여전히 높으므로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함.
 - 또한 국민 1인당 장서수(책)는 1.01권으로 미국 3.00권, 일본 2.64권, 영국 1.85권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이 외에도 공연장을 지속적으로 증설하였는데, 특히 2005년에는 과거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1997년 161개소 → 2002년 303개소 → 2006년 12월 현재 531개소

〈표 2-13〉 주요 국가별 도서관 현황

국 명	기준년도	인구수(명) (A)	도서관수 (개관)(B)	1관당 인구수(명) (A/B)	장서수(책) (C)	1인당 장서수(책) (C/A)
한 국	2006	48,991,779	564	86,865	49,242,282	1.01
미 국	2004	287,871,383	9,211	31,253	871,889,000	3.00
영 국	2004	59,700,464	4,624	12,911	110,111,000	1.85
일 본	2004	126,688,000	2,825	44,845	333,962,000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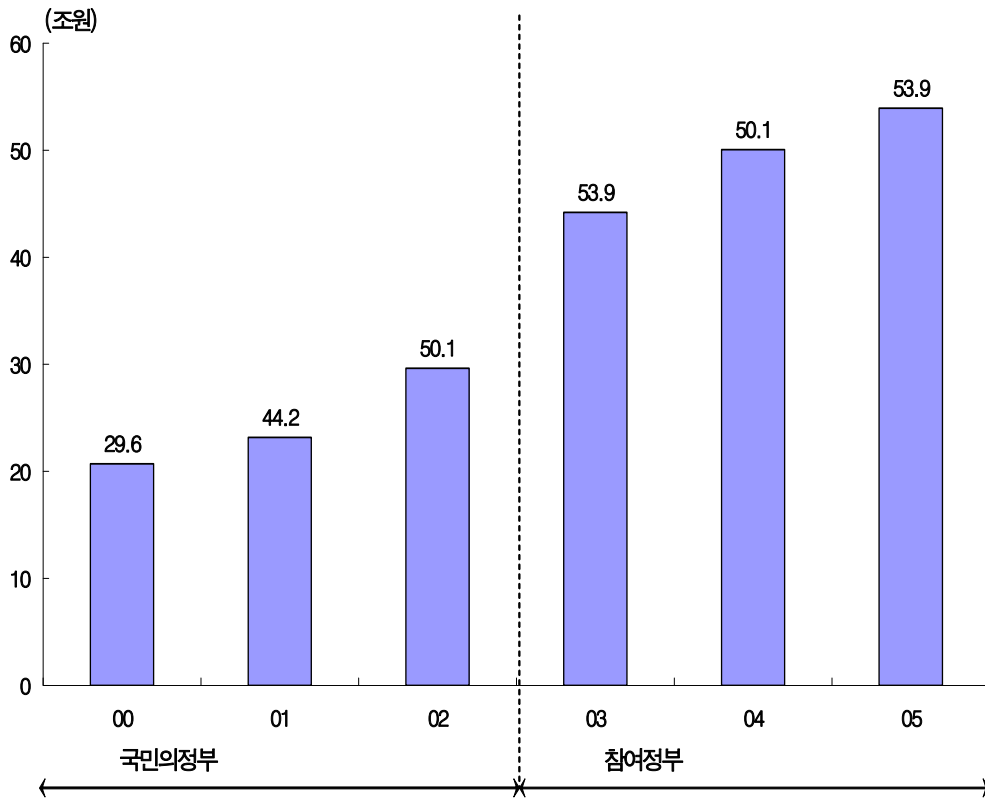
자료 : 미국 NCLIS (U.S.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영국 도서관통계기구 (LISU: Library & Information Statistics Unit)
 일본도서관협회 “圖書館年鑑 2005”
 기타 : LibEcon(<http://www.libecon2000.org>)

2. 문화산업 매출액

□ 문화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출액은 2002년 약 30조원에서 2005년 약 54조원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GDP의 6.4%를 차지함.

— 출판분야가 전체 문화산업 매출규모의 38.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광고 16%, 방송 15.5%, 게임 8.6%, 캐릭터 8.4% 순임.

[그림 2-41] 문화산업 매출액



주 : 기타는 만화, 디지털교육 및 정보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 문화산업 규모는 세계 문화산업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05년 동안의 연평균 문화산업 성장률은 세계 문화산업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임.

〈표 2-14〉 세계 문화산업 규모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2005 연평균성장률
세계 문화산업 규모 (성장률)	1,058,862 (2.0)	1,104,493 (4.3)	1,160,638 (5.1)	1,255,109 (8.1)	1,328,786 (5.9)	5.8%
한국 문화산업 규모 (성장률)	23,777 (4.1)	25,560 (7.5)	27,270 (6.7)	29,022 (6.4)	29,571 (1.9)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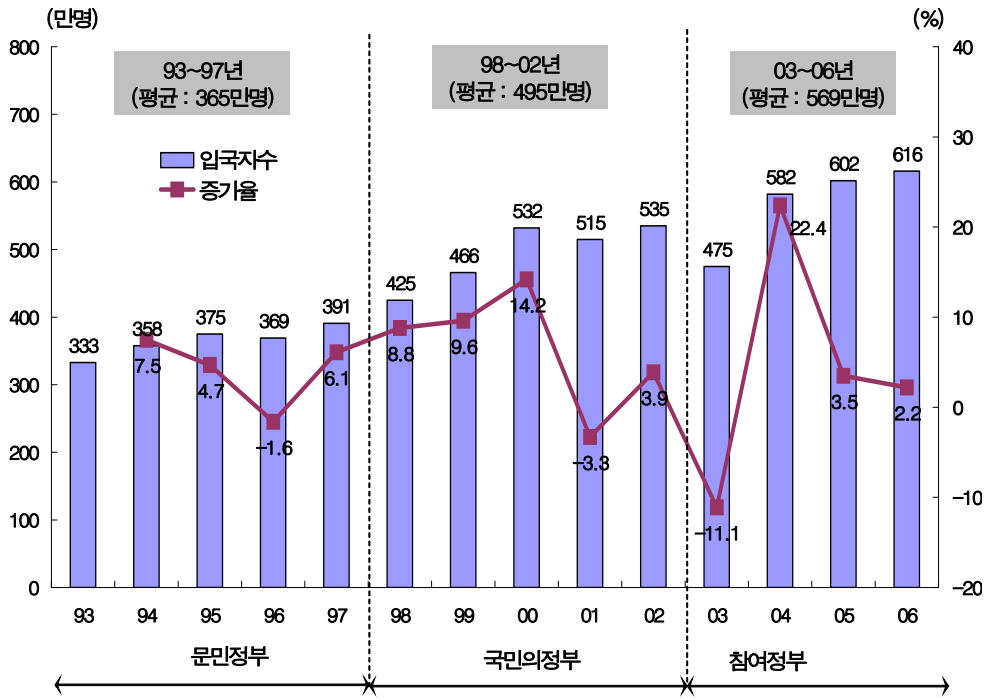
자료 : PWC, 2006

3. 외래 관광객 입국자 수

□ 적극적인 해외홍보 마케팅, 한류 등 시장별 특화관광상품 개발, 국제회의 유치 확대 등을 통한 외국인 관광시장의 지속적 확대로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이 600만명을 초과하였음.

— 특히, 중국시장을 적극 개척하기 위해 중국관광객 출입국 절차 간소화, 안내서비스 개선, 중국 전문식당 확대 등을 추진함 (중국관광객: 2003년 51만명 → 2006년 90만명).

[그림 2-42] 외래관광객 입국자 수



주 : 2006년도 외래관광객 입국자수는 추정치임

자료 : 문화관광부

4. 생활체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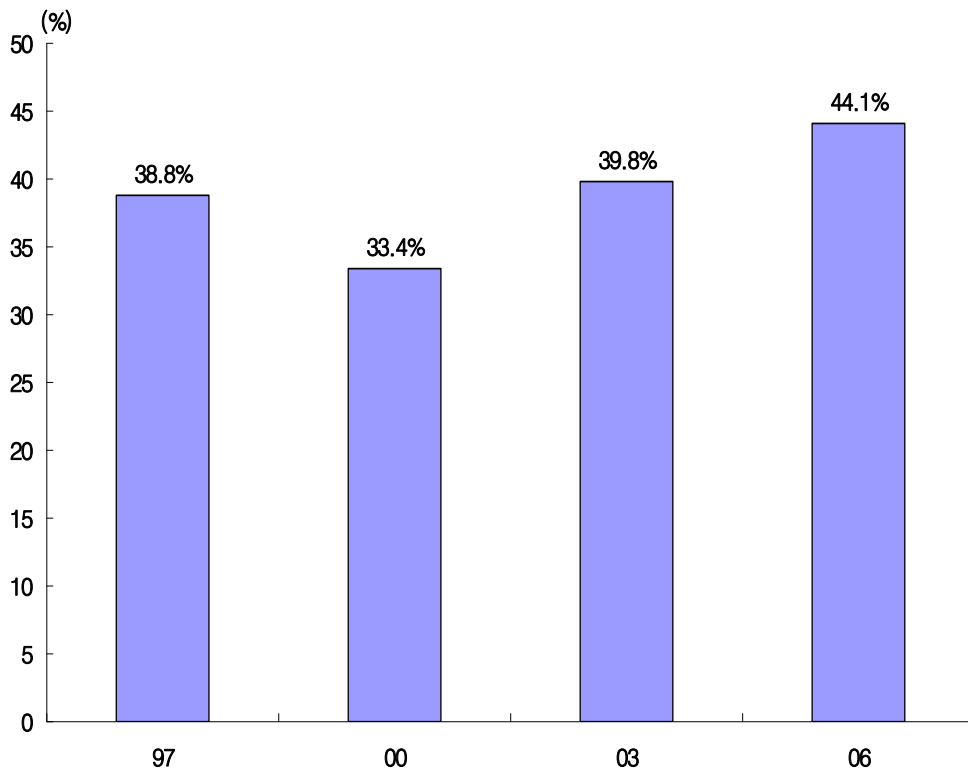
□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국민생활체육참여율이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의 진입이 예상됨

— IMF시기인 1997년도 이후 2000년도까지 참여율이 많이 하락하였으나 이후 2003년도에 이전 참여율을 회복하였으며, 2006년도 참여율은 2000년 보다

10.7%포인트 증가하여 44.1%까지 증가함.

- 참여정부기간 동안 생활체육 참여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

[그림 2-43] 생활체육 참여율



주 :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3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임(통계주기: 3년)

〈표 2-15〉 주요 국가의 생활체육참여율

국 가	비교연도	주 2~3회이상 참여율
미 국	1986	67.0%
프랑스	1985	73.7%
일 본	1987	60.0%
독일 에센시	2001	40.5%
독일 라인-지크-크라이스 지역	2001	44.0%

- 주 : 1) 주요 선진국의 체육시설 면적은 지자체별로 관리되고 있어 주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통계가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음.
 2) 선진국마다 국민 선호 체육시설이 종목별로 달라 설치 시설물의 면적에서 큰 차이가 있고 면적 산출 기준이 서로 달라 일률적인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5.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 전국 공공체육시설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6,146개소에서 2005년 8,717개소로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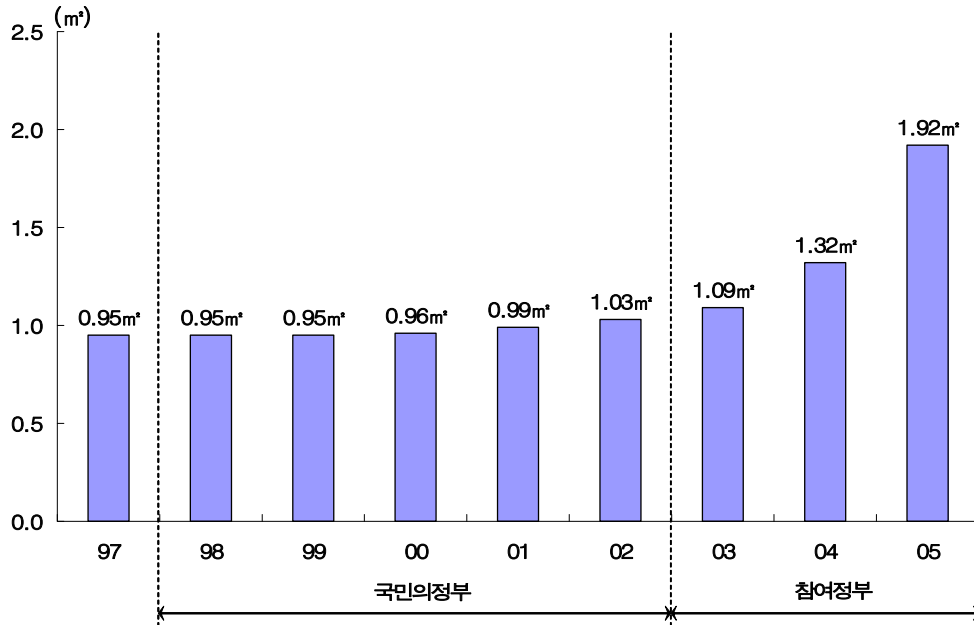
— 이는 참여정부 4년 기간에 무려 42%나 증가한 것임.

- 1인당 체육시설면적은 1997년 0.95㎡, 2002년 1.03㎡에서 2005년 1.92㎡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음.

— 이는 참여정부 3년 기간에 85%가 증가한 것임.

— 그러나 선진국의 1인당 체육시설 면적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요망됨.

[그림 2-44]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주 : 98~'01 및 '03~'04년은 증가추세에 의거한 추정치
 자료 : 문화관광부

<표 2-16> 주요 국가의 1인당 체육시설 면적

국 가	비교연도	체육시설 면적(m²/인)	비고
독일 베를린시 현황	2004	2.01	순수시설 면적
독일 설치 기준	2000	4.2	순수시설 면적
프랑스 설치 기준	1993	6.0	인구 10만 도시
		11.0	인구 1000명 지역

주 : 1) 주요 선진국의 체육시설 면적은 지자체별로 관리되고 있어 주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통계가 관리되고 있지 않음
 2) 선진국마다 국민 선호 체육시설이 종목별로 달라 설치 시설물의 면적에서 큰 차이가 있고 면적 산출 기준이 서로 달라 일률적인 잣대로 비교 수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자료 : 문화관광부

제 7 절 환경

1. 자연환경보호지역 면적

□ 자연환경보호지역의 면적은 문민정부('97) 8,545km²에서 국민의 정부 ('02)9,357km², 참여정부('06년) 11,154km²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지역이 크게 증가하였음(2005.9.9).
- 전국토 대비 자연환경보호지역 비율은 11.2%로 상승하였으나 OECD 평균(15%)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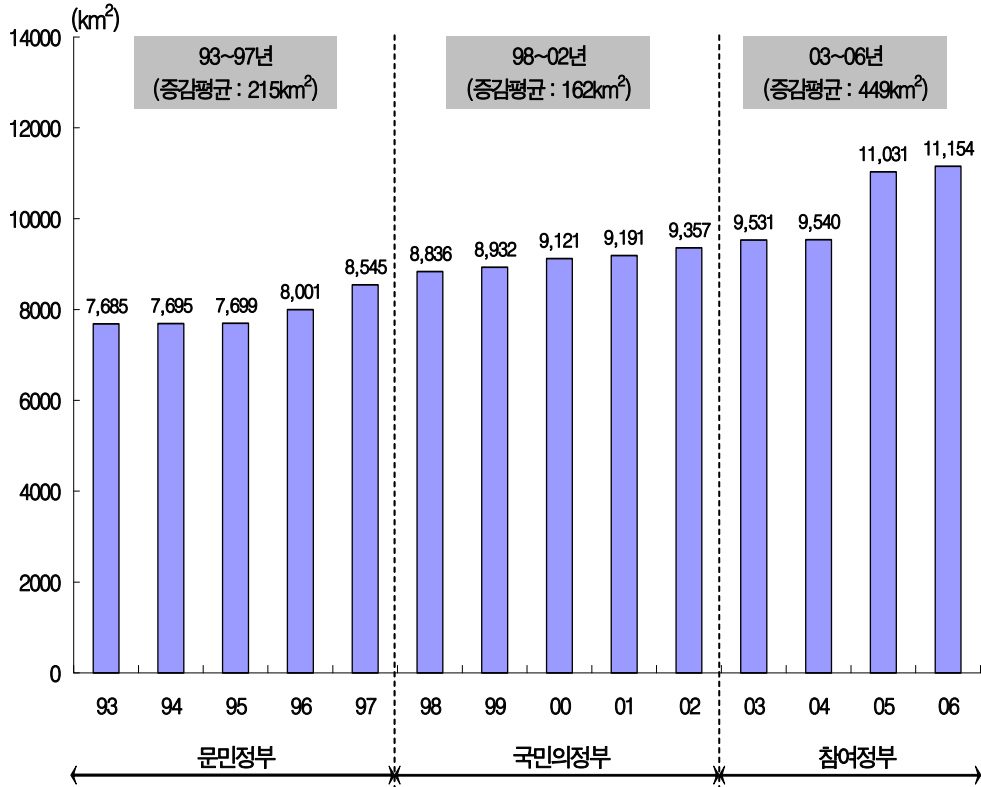
〈표 2-17〉 자연환경보호지역 면적

(단위 : km²)

문민정부('97)	국민의 정부('02)	참여정부('06)
8,545	9,357	11,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자연공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호지역인 자연공원,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확대 • 자연공원 159km², 야생동·식물보호구역 515km² • 관련법 제정으로 습지보호지역 및 특정도서 신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지역 크게 증가('05.9.9) • 총 2,634km²(핵심구역 1,699km², 완충구역 935km²) ※ 이중 47.5%는 기존 자연공원과 중복 •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 외의 자연환경보호지역도 계속 확대지정 • 생태·경관보전지역 160km², 습지보호구역 170km²,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37km², 특정도서 1km² 등

주 :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법상 백두대간보호지역,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 면적

[그림 2-45] 연도별 자연환경보호지역 면적 (누계)



자료 : 환경부,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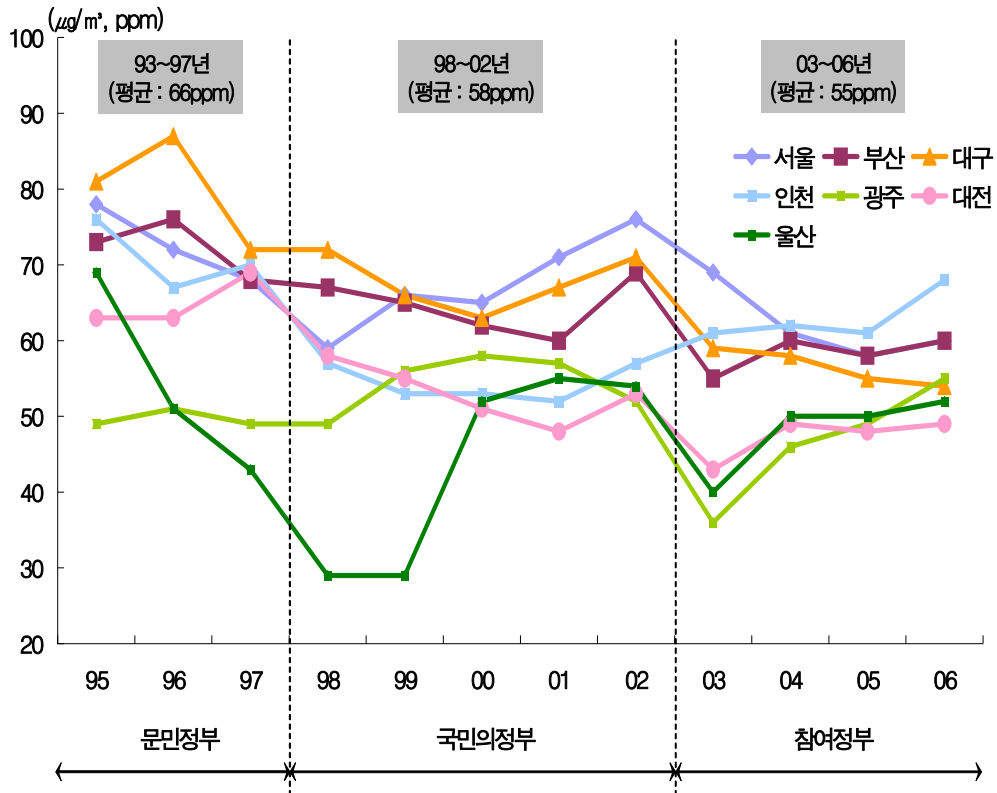
2. 대기환경 수준

□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대전 등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의 대기환경(미세먼지) 수준은 참여정부 들어 크게 개선되었음.

— 다만, 인천의 경우 문민정부(70ppm)때 보다는 개선되었으나 국민의 정부 (57ppm)때 보다는 악화(61ppm)된 것으로 조사됨.

— 대기환경(미세먼지) 수준은 미국 워싱턴 23ppm('03년), 영국 런던 27ppm('04)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그림 2-46] 주요 도시별 연간 미세먼지 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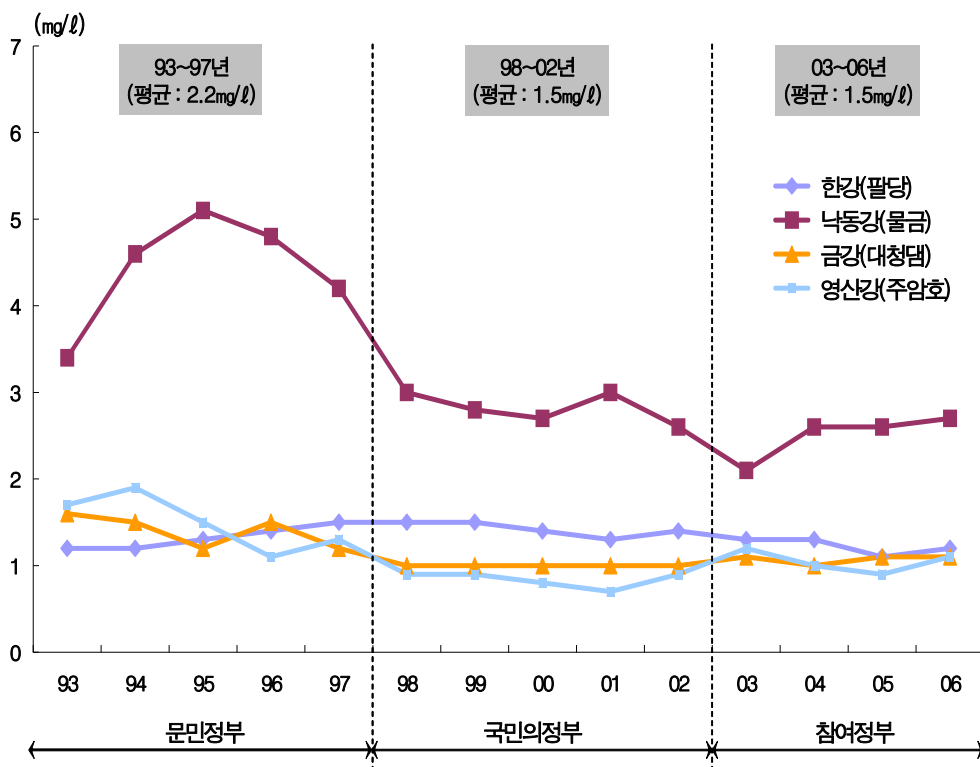
자료 : 환경부, 각 년도

3. 4대강 상수원 수질오염도(BOD, COD)

□ 한강(팔당호)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역대 정부보다 참여정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수질이 개선됨.

- 낙동강(물금), 금강(대청호), 영산강(주암호) 등은 문민정부 때 보다는 개선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시기와는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일본 동경의 최대 상수원인 小河内貯水池의 BOD는 1.8mg/ℓ 수준임.

[그림 2-47] 4대강 상수원 수질오염도(B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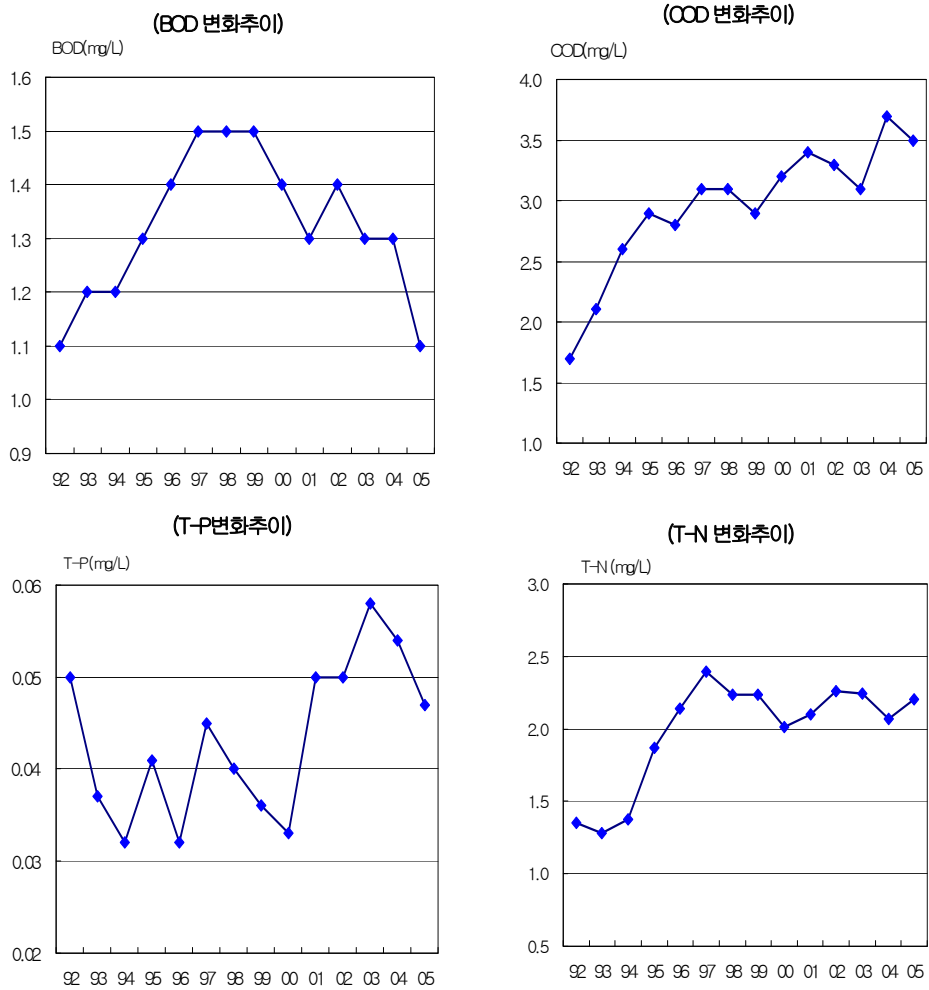


자료 : 환경부, 각 년도

- 한강(팔당호)의 수질오염도 중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2004년 크게 악화되었다가 2005년부터 다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한강에 대한 수질환경개선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T-P(총인), T-N(총질소)의 경우 2000년도 이후 점차 악화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지속적 관리가 요망됨

[그림 2-48] 한강 상수원(팔당) 수질오염도(BOD, COD 등)



자료 : 환경부, 각 년도

4. 상수도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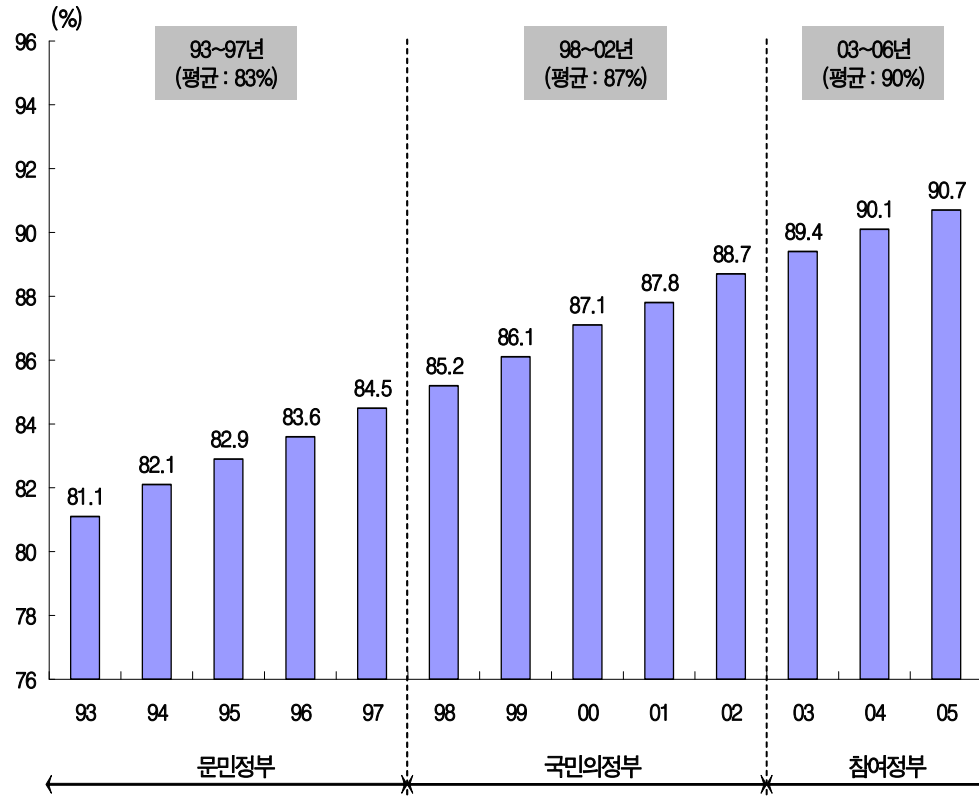
□ 상수도 보급률의 연평균은 문민정부 83%, 국민의 정부 87%였으나 참여정부에서
는 90%로 증가하였음.

- 참여정부의 경우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상수도 보급률은 아직 일본의 96.9%('04)보다는 낮은 수준임.

〈표 2-18〉 상수도보급률

문민정부('97)	국민의 정부('02)	참여정부('06)
84.5	88.7	9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및 도서지역 상수도사업 확충사업 • 1,674억원('94~'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확충 사업 확대 • 2,555억원('98~'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정부에서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의 대폭증액으로 보급률이 크게 증가 • 투자예산(억원): 2,555('98~'02) → 3,708('03~'05)

[그림 2-49] 연도별 상수도 보급률



자료 : 환경부, 각 년도

5. 하수도 보급률

□ 하수도 보급률은 문민정부 48%, 국민의 정부 71%, 참여정부 81%로서 참여정부에 들어와 크게 증가한 것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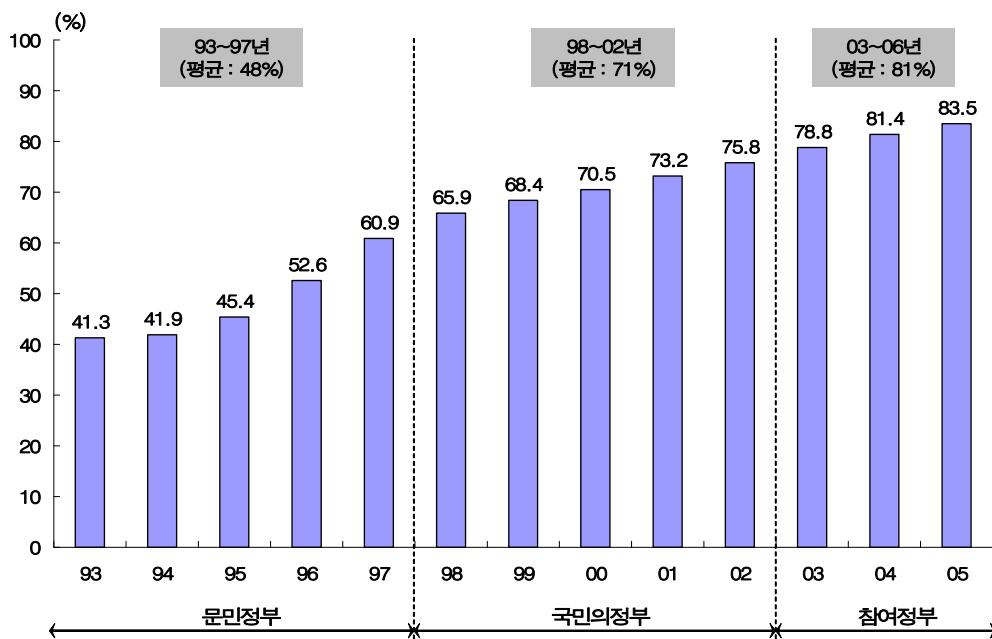
—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2003~2007년 기간 동안 총 11조8,405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오고 있음.

— 참여정부의 하수도 보급률은 덴마크 89.0%('04)보다는 낮으나 일본 64.0%('04), 프랑스 76.9%('04), 핀란드 81.0%('04)보다는 높은 수준임.

〈표 2-19〉 하수도 보급률

문민정부('97)	국민의 정부('02)	참여정부('06)
60.9	75.8	83.5('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처리장 및 관거 정비: 2조1,746억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처리장 및 관거 정비: 6조 460억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07까지 11조8,405억원 투자계획 • 일반재정투자: 7조2,405억원 • 민간투자사업(BTL)투자 : 4조6,000억원

[그림 2-50] 연도별 하수도 보급률



자료 : 환경부, 각 년도

제 3장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의 사회정책분야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거시적 측면에서 실시하였다. 사회정책분야는 복지·의료, 교육, 인적자원 개발, 여성·보육, 주거복지, 문화체육, 환경 등 7개 분야로 국한하였다.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그 어느 정부에서 보더라도 참여정부는 사회정책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하였고, 재정투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무척 노력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그렇지만 큰 폭의 재정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 효과성을 거두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물론 정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없는 근본적 한계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책 또는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국민의 복지에 대한 기대감은 증대시켰지만 실제 복지체감도는 높지 않았음이 단적인 근거로 할 수 있다.

셋째, 기초보장, 자활 등 공공부조에 대한 복지재정의 집중으로 말미암아, 현대 사회변동에 적응하기 위하여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복지예산의 투입이 충분하지 않아 전통적 복지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국가예산의 효율적 배분, 복지예산의 분야별 적정 배분이 이루어져 사회정책의 개별분야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넷째, 사회정책은 예방적 측면의 관심이 문제 치료적 측면보다 높아야 비용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적이 가시화되는 문제치료가 아니라 계량화 및 가시화가 어려울지라도 문제예방에 초점을 둔 사회정책의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투자와 미래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적 투표권이 없어 그 동안 등한시 되어 온 정책대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과감한 정책투입이 있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출생부터 자립까지’의 생애주기 전 단계에 사회정책적 관심이 증대되어야 한다. 보호, 교육, 건강, 능력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균등한 출발과 이를 위한 기회보장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